

아시아의 근대성과 도시 한국 도시경험을 중심으로

The Modernity of Asia and City: the Korean Urban Experience

조명래*

이 글은 아시아의 진정한 근대성을 사유하게 되는 시대의 도래 속에서 삶의 터전으로서 도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한국의 도시화 경험을 중심으로 사색하면서 아시아란 정체성의 외연이 확장된 시공간 속에 새롭게 설정되는 삶의 재주체화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글은 먼저 근대성의 보편가치와 특수가치, 성찰성의 문제, 근대성의 표현으로서 공간환경의 문제들을 개관하고, 나아가 탈근대 시대 아시아의 근대성을 ‘혼용적 근대성과 재현적 근대성’이란 개념으로 검토한 뒤, 이의 공간환경적 재현 문제를 한국의 도시화 경험을 사례로 검토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결론에서는 탈근대 시대 아시아란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보되, 이는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함의로만 제시된다.

주요어: 계몽주의, 근대성, 아시아적 근대성, 식민지 근대성, 도시적 근대성, 재현적 근대성

1. 서론

아시아는 세계사적 변화의 중심에 있다. 20세기 후반 서구 중심국으로부터 해방과 독립, 국민국가들에 의한 뒤 늦은 근대화화 and 눈부신 경제발전, 경제협력의 지역화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구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그

*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myungraecho@naver.com)

간 서구에 의해 규정된 아시아가 이제 아시아 자신에 의해 그려지는 ‘정체성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세계자본주의의 지형지세를 심대하게 재편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체들이 일상적 삶을 꾸려가는 미시적인 장소의 지형지세마저 급속히 재편하는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삶의 터전으로서 공간환경의 이러한 재편은 외세에 의해 억압되고 왜곡되었던 아시아의 근대성이 아시아적 가치란 이름으로 바야흐로 발현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근대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이의 공간환경적 표출로서 도시, 가령 아시아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도시란 삶의 터전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그 결과 도시란 공간환경을 통해 재현되는 아시아의 근대성은 어떠한 것인가?

이 글은 아시아의 진정한 근대성을 사유하게 되는 시대의 도래 속에서 삶의 터전으로서 도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한국 도시화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색하면서 아시아란 정체성의 외연이 확장된 시공간 속에 새롭게 설정되는 삶의 재주체화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글은 먼저 근대성의 보편가치와 특수가치, 성찰성의 문제, 근대성의 표현으로서 공간환경의 문제들을 개관하고, 나아가 탈근대 시대 아시아의 근대성을 ‘혼용적 근대성과 재현적 근대성’이란 개념으로 검토한 뒤, 이의 공간환경적 재현 문제를 한국의 도시화 경험을 사례로 하여 검토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결론에서는 탈근대 시대 아시아란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보되, 이는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함의로만 제시된다.

2. 근대성의 문제와 도시

근대성(modernity)은 서구에서 17세기 계몽주의 등장 이래 근대사회 발전과정을 통해 이룩된 정치, 경제, 문화, 이념의 성질을 총합하는 표현이다.¹⁾ 서구의 근대 역사 전개과정에서 추상화되어 나온 근대성은 근대 역사로서의 보편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

공간의 편차를 반영하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 중 보편적 근대성은 계몽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임정택, 1994). 이 점에서 보편적 근대성을 ‘계몽주의적 근대성’이라 부르며, 이는 근대성의 핵심가치를 표방한다(이하 내용은 조명래, 2002d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이성과 합리성’, ‘인간주의’, ‘시민중심적 사회성’, ‘진보와 해방’로 집약되는 근대성의 핵심가치는 계몽주의를 현실사회의 가치로 옮겨내는 노력 속에서 보편가치로서 걸러진 것들이다.²⁾ 근대성의 이러한 보편가치는 서구의 근대사회가 구축되고 작동하는 문명 전반에 배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구 밖으로 확산되면서 비서구의 근대사회 형성과 발전에도 투영되었다. 이 말은, 계몽주의의 핵심가치는, 서구이든, 비서구이든, 인간사회의 합리적 발전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지능력과 사회구성 능력에 의해 추구되는 보편가치임을 뜻한다. 그러나 근대의 모든 사회가, 이러한 근대성의 보편가치를 추구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깔고 있지만, 실제의 사회적 삶으로 조직되고 배태되는 것은 해당 사회의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구체화되고 또한 차별화된다. 우리는 이를 ‘근대성의 특수성’ 혹은 ‘특수성으로 근대성’이라 부른다.

근대성의 특수성은 근대성의 시공간적 편차에 의해 규정된다. 가령, 영국과 한국의 근대성 혹은 유럽과 아시아의 근대성은 등장시기, 내부의 계급관계, 제도적 여건 등의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된 특성을 갖는

1) 이런 점에서 “근대성은 서양 근·현대를 관류하는 총체적인 역사적 경향을 규정 짓는 시대정신(Zeitgeist)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근대주의(modernism)는 그러한 시대정신이 예술 영역 일반에까지 발현되는 양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윤평중, 1992; Kumar, 1995).

2) 계몽주의가 서구의 근대사회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면, 18세기 초에는 프랑스 귀족들의 신지식운동으로 등장했고(예: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18세기 중엽에는 인간 자체를 주목하는 관점(예: 흄의 오성론)으로 발전되었으며, 18세기 후반에 가면 소시민들의 사고 및 실천체계로(예: 루소의 사회계약론) 확산되면서, 이를 배경으로 시민혁명, 산업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근대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민사회 등으로 구현되었다(이에 대해 자세한 논의는 조명래, 2003a 참조).

다. 계몽주의적 이성, 합리성, 인간주의, 진보, 사회성 등의 핵심가치를 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면에서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것의 역사구체적인 내용과 실체는 영국과 한국, 유럽과 아시아의 근대가 처한 시공간적 상황성의 차이만치 다르다. 때문에 현실에서 근대성은 보편적인 형태, 즉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순정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의 형태와 가치로 존재하면서 현실사회에 대해 실제 효과를 갖는다. 이에 견주어 근대성의 보편가치는 근대성의 특수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해주는 잣대가 된다. 즉 특정국가와 특정시대의 근대성이 얼마만큼 해방적이고, 얼마만큼 인간중심적이며, 얼마만큼 진보적인 것인지는 근대성의 보편성이란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근대성의 특수성은 근대성이 추상적 가치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과정과 제도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대성은 ‘근대성이 구현되는 과정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홀(Hall, 1992)의 주장은 근대성을 구성하는 핵심가치인 이성, 합리성, 인간주의, 진보 등이 모두 근대사회의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의 정치, 근대의 경제, 근대의 사회, 근대의 문화 등은 모두 근대성의 핵심가치가 구현되고 실현되는 영역들이다. 정치영역에서 권력이 민주적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화되고, 경제영역에서 합리적 시장거래 체계가 확립되며, 사회영역에서 합리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문화영역에서 합리적인 삶의 양식과 정서구조가 확립되는 것은 모두 근대성이 발현되는 영역이자 실제 현상들이다.³⁾

3) 기든스(Giddens, 1990)는 “근대성을 대략 17세기경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어 점차적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사회생활이나 조직양식이라 부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근대성은 자본주의, 감시체제, 군사력, 산업주의 등 네 가지 영역의 제도화를 통해 구현된다. 여기서 ‘자본주의’는 자본과 노동이란 사회적 생산관계의 합리적 제도화’, ‘감시’는 분업화된 근대사회의 각종 기능과 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사회적 응집성을 유지하는 ‘국가통치의 합리화’를, ‘군사력’은 타국가와의 경쟁을 통한 국민국가(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폭력의 합리적 제도화’, ‘산업주의’는 자연환경으로부터 최대의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합리적 제도화’를 각각 의미한다.

근대성을 과정으로서 혹은 특수성으로서 이해한다면 근대화를 뒤늦게 추진하거나 압축적 성장을 겪는 비서구의 근대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아시아와 같은 비서구의 근대성은 근대화가 곧 서구화라는 현상인식을 불러왔다. 또한 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서구 가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관철되는 현상인식을 불러왔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성은 온전히 ‘서구적 현상(the western phenomenon)’에 불과한 것이기에 비서구에는 근대가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이성환, 1994: 154).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대성의 보편성보다 특수성(즉, 서구 근대성의 제도화에 따른 특성이 함축하는 권력관계나 그 파행성을 과도하게 주목한 데 따른 것이다. 전통적인 권위로부터 벗어나 인간이성과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적인 사회적 삶을 추구하는 경향과 추동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되는 근대의 보편성이다. 차이가 있다면 근대의 보편적 가치가 각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결합되어 구현되는 근대적 제도화의 차이로서 이는 어디까지 근대성의 특수성 차이인 것이다. 서구의 근대성은 내부의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성숙되어 나왔을 뿐 아니라 오랜 시간의 시행착오와 제도적 장치의 구비를 통해 형성된 것인 만큼, 구성구석에 내용을 풍부히 채우고 있다. 반면 비서구의 근대성은, 서구 근대성이 외부적으로 확산되는 시공간적 과정에 편입되는 결과로 생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부의 조건과 충분한 시간적 경험을 가지지 못하고 서구 근대성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결과, 비서구 근대성의 내적 구성엔 결여된 부분이 많고, 또한 내생적 유재(遺在)들이 불안정하게 병존해 있다. 그 형성 과정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비서구의 근대성과 관련해서는 근대성의 순수한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더욱 큰 쟁점과 주목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서구의 근대성도 서구 특유의 시공간적 상황 속에서 일상 삶으로 구체화됐다면, 이 또한 특수성으로서의 근대성을 의미한다.⁴⁾

4) 특수성의 차이를 보편성의 차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탈근대성의 논의는 근대성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비서구 사회에서도 논의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근대성의 이해는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일상 삶으로 조직되고 실천되며, 그 결과로 근대성의 보편가치와는 어떠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계몽으로서 근대성이 갖는 본래적 사유방식이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은 오랜 시간 동안 전개되어 온 서구의 근대성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것은 근대성의 한계가 노정되는 것도 서구의 근대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구의 도움으로 ‘뒤늦은 근대화’를 추구하는 비서구의 근대성에서는 서구의 근대성에 의해 저평가되었던 부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재해석되는 것이 근대성 성찰의 주요 내용이 된다. 어떤 경우이든, 근대성이 가지는 재성찰성은 근대성의 자기 계몽과 변증법적 진화를 향한 내재적 추동력이지만, 그것의 발현과 진정성, 즉 근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성찰의 여하는 서구와 비서구의 근대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근대성은 시간을 통해 출현하였지만 공간을 통해 숙성된다. 그 공간은 대개 근대문명이 집결되어 있는 도시를 지칭한다(Friedland and Borden, 1994: 9). ‘근대성은 도시다’라고 부를 정도로 근대성은 도시를 통해 등장했고, 도시에서 구체화되었으며, 도시를 통해 변한다(Lash, 1992). 근대성과 도시는 이렇듯 서로를 반추하는 거울인 셈이다. 근대도시의 등장과 형성은 우선 전통공간의 해체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진다. 전통공간을 대면적인 일상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적 공간’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면, 근대 도시공간의 등장은 전통공간에 각인되어 있던 사회적 관계가 탈장소화되는(displaced or disembedding) 동시에 도시란 인공공간에서 근대 합리적인 삶의 관계로 재장소화되는 것(reembedding)을 의미한다. 이런 연유로 베버(Weber)와 같은 고전이론가들은 근대(산업)도시의 출현과 성장을 전통적인 공동체적 사회관계로부터 근대 합리적인 결사적 사회관계로 변화하는 그 자체로 이해하였다(조명래, 2002d: 제3장).

따라서 근대 도시화는 생산을 위한 물적 시설이 배열되는 현상으로서

의미해준다.

가 아니라, 근대산업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인간관계, 생활양식, 거래방식, 규제양식 등이 형성되는 사회적 변화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도시적 변용이 특히 근대성을 달성하는 조건이 되는 까닭은 도시의 미시적 일상관계로부터 거시적 체제과정이 모두 ‘합리성’을 근간으로 조직되고 작동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근대성의 형성은 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사회관계, 조직, 제도가 합리화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심화는 근대 사회체제 전반의 합리화와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근대성을 자본주의의 심화로 본다면, 근대도시는 자본순환과 축적의 장으로 기능해오는 동시에 노동계급의 재생산을 도모하는 장으로 기능해 왔다. 근대성을 권력의 합리적 배분방식인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으로 본다면, 근대도시는 근대 시민들을 배출해 왔을 뿐 아니라 근대 부르주아 민주정치를 촉진하는 장으로 기능해 왔다. 근대성을 보편적인 삶의 정서를 반영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간주한다면, 근대도시는 다원적인 대중문화와 이념을 생산하고 일상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장으로 역할 해 왔다. 이렇듯 도시의 근대성은 도시에 담긴 근대성 혹은 도시를 통해 표현되는 근대성과 같은 뜻을 갖는다. 도시의 근대성은 도시의 미시적인 일상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제도, 도시의 정치, 도시의 공간 전체에 투영되어 있다. 근대도시가 담고 있고 근대성은 ‘기술합리성’, ‘인간관계의 도구화’, ‘소비, 상품성, 화폐화’, ‘중심성과 체제성’, ‘대중적 미학성’, ‘남성성’, ‘진보’ 등으로 규정된다(조명래, 2002d: 제8장).

이념형적으로 본다면, 도시의 근대성은 그 기저에선 ‘계몽주의적 근대성’, 즉 근대성의 핵심가치들을 깔고 있다. 하지만 실재하는 근대도시들은 각 나라의 근대화가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로 제도화되는 방식의 차이, 즉 특수성으로 근대성을 상이하게 표현한다. 가령, 서구의 근대도시들은 기독교적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근대 합리적 공간으로 등장하지만 자본주의적 합리성이 구축되는 사회공간으로 바뀌면서 일상의 상품화와 소외를 도시적 특징이나 한계로 드러냈다(자세한 것은 하비, 2005, 메리필드 2005, Katznelson, 1992 참조). 반면, 비서구의 근대도시들은

식민화와 탈식민화, 국가주의와 산업주의, 전통적인 인간관계와 시민 주체화 등의 이질적이면서 대립적인 요소들을 복잡하게 투영하는 사회공간으로 만들어지면서 일상의 급속한 물질화(자본주의화)와 정체성화를 도시적 모순이자 특질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연루되는 후기 근대인 오늘날, 도시적 일상은 국민국가의 영역을 넘어 초도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서구와 비서구의 구분이 무디어지는 듯하면 서도 각각은 ‘확장된 정체성’의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사유공간’(쑤자, 2003)으로 간주될 정도로 도시를 통해 ‘탈근대적 근대성’을 공유하는 확장된 정체성 혹은 재현적 공간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3. 탈근대 시대 아시아의 근대성

1) 아시아란 공간

아시아의 근대성을 규정하기 위해선 아시아란 공간영역의 설정과 아시아의 근대란 시간 영역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근대성의 핵심가치들이 어떻게 아시아란 시공간 속에서 차별적인 삶의 방식과 제도로 발현되었는지, 이를 통해 드러나는 근대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가 파악되어야 한다.

아시아란 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보스포러스(다아넬나스) 해협 너머의 땅인 오늘날의 터키반도 쪽을 가리켜 부른 이름이다⁵⁾(강정인, 2002). 그 이후 유럽인들의 시선이 동쪽으로 점점 더 멀리 미치게 되면서 그들의 상상적 지리 속에서 아시아는 유럽 밖 동쪽을 포괄하는 지리범역이 되었다⁶⁾(박동천, 2002: 33). 그래서 유럽인에게 아시아는 터키반도, 페르시아

5) 후에 확대된 아시아와 원래의 아시아인 터키 반도를 구분하기 위해 후자를 ‘소아시아(Asia Minor)’라 부른다.

반도, 인도대륙, 인지차이나 반도, 중국대륙, 그리고 그 일원까지 망라되어 있다. 오늘날 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우랄산맥 동쪽을 주로 지칭한다(박광주, 2005).

아시아에 대한 유럽인들의 공간인식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7, 18세기 제국주의적 팽창을 선도하던 영국이 인도를 포함해 자원이 풍부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을 식민화하면서부터이다. 영국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동서를 나누고 지구상의 각 지역을 위치지우는 경도의 설정과 세계 표준시를 도입했던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는 유럽(영국)을 중심으로 근동(Near East), 중동(Middle East), 극동(Far East)으로 분류되었다.⁷⁾ 유럽인들의 이러한 근대 지리지식이 형성되는 이면에는 17, 18세기에 대두한 유럽의 근대 계몽주의적 문명이 세계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른바 유럽중심주의 혹은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가 구축되고 있었다(강정인, 2004).

근대가 유럽의 시간을 기점으로 하고 유럽문명이 세계의 표준으로 떠오르면서 서구 근대성의 그림자는 세계전역으로 드리워졌다. 근대 아시아란 공간도 유럽의 근대성이 만들어내는 역학 관계 속에 자리 매김되었다. 그리스 이래 ‘유럽에 대해 주변적, 잔여적, 타자적 범주’로 여겨졌던 아시아가 근대에 들어 유럽 근대성에 의해 본격적으로 식민화된 것이다. 유럽인이 그리는 아시아에 관한 인식지도는 단순한 지리적 범역이 아니라 유럽의 우월한 근대성이 총과 같은 힘, 상품교역을 통해 이식되는 공간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유럽-비유럽, 중심-주변, 지배-종속, 근대-전근대, 계몽-야만이란 관계식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 근대성의 확산이 일방적인 것만 아니다. 서구의 근대란

-
- 6) 이것이 함의하는 바, 아시아란 말은 아시아로 간주되는 지역 내의 주체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 유럽인들이 ‘(유럽) 저 너머 동쪽’을 피상적으로 타자화하는 인식을 통해 만들어졌다(박동천, 2002: 33).
- 7) 딜릭(Dirlik)에 따르면 아시아란 개념은 17세기 예수회 수사들에 의해 중국에 소개되었다고 한다(강정인, 2002). 이는 중화문명권 내에서는 애당초 아시아란 개념이 본래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간성이 비유럽이란 공간으로 확장되는 속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서구의 신문물과 신사고도 함께 묻어갔다. 이는 ‘외부의 충격’으로 작용하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 내부로부터 계몽을 위한 개혁이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일본의 메이지유신, 한국의 갑오경장, 중국의 무술정변과 신해혁명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개혁은 근대의 핵심개념인 평등사상, 과학사상, 민족사상 등을 토대로 국가별 근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지만임춘성, 2005: 56), 18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었던 유럽의 계몽운동에서 보듯, 아시아의 중세사회에 대 자기성찰과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제도화해내는 실천운동으로서 지속성과 파급성을 갖추지 못했다.

서구의 근대성은 결론론적으로 이성과 합리성을 신봉하는 ‘근대의 주체로서 (자연권을 가진 시민)’의 등장에 의한 것이었다면, 아시아의 18, 19세기에 있음직한 계몽운동은 서구의 식민지 근대성이 부과한 외부충격에 대한 자각반응에 불과해 전통적인 지식, 가치, 지배구조 등을 재해석하면서 합리적 인간 및 권리관계를 만들어내는 근대성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때문에 서구의 근대와 차이 중에서 핵심은 합리성과 이성으로 무장된 ‘근대의 주체’를 탄생시키지 못한 점인데, 이는 아시아의 근대성이 미완으로 남게 되는 까닭이면서 동시에 아시아 각국의 근대화가 여러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⁸⁾

지리적으로 아시아는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아시아란 공간적 범주는 아시아의 내부로부터 규정되기보다, 이렇듯 외부, 특히

8) 히야마 히사오에 의하면, “동양의 근대화는 서양 근대의 충격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설사 그 전사(前史) 속에 근대가 이미 싹트고 있었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서양 근대의 조력이 필요했다. 다른 힘의 강제 없이 내발적으로 발전해 온 서양 근대와는 이 점에서 현저히 달랐고 어려움도 또한 여기에 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양 근대의 조력은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에서 보듯 흔히 침략의 모습을 취했던 까닭에 문제는 더욱 복잡했다”(히사오, 2000: 30). 이러한 복잡성은 동아시아의 근대 형성이 위로부터의 혁명에 성공한 일본이 세계제국의 일원으로 떠오른 반면, 중국은 반식민지로,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하는 서로 다른 근대의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서로 다른 후기 근대의 경험과 탈근대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서구의 제국주의적 근대화가 그려낸 세계지리의 한 부분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시아가 지리적으로는 있었지만, 아시아의 주체들이 자의식적으로 그들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지식체계 및 권력구조를 내부로부터 재해석하고, 그 결과로 그들의 집합적 삶을 구축하는 공간범역으로 아시아는 최소한 유럽의 근대성이 원심적으로 작용하는 동안은 분명치 않았다.⁹⁾ 식민화를 겪지 않고 지금까지 강국의 일원으로 남아 있는 일본의 경우, 그들의 문화적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서구에 의해 반식민화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들도 그러한 운명을 당할지 모르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철저한 유럽 배끼기를 통해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강조하는 ‘동양주의’¹⁰⁾를 내세웠지만(서윤/정연, 2005: 12), 그 뒤에서는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슬로건에서 보듯 ‘비록 땅으로는 아시아에 있지만 정신문화적으로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속하는 것’을 지향했다(쓴거, 2003).¹¹⁾

9) 박광주는 이러한 현상을 “유럽의 제국주의적 진출은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의 공동운명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유럽에 대한 저항이란 점에서 공통성을 띠었을 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아시아인 사이에서 생겨나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한 “유럽이 전 지구적으로 세력 확장을 추구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이곳이 한 지역으로 성립되었던 것이다. 유럽인들의 눈에 ‘대상화(對象化)’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라고 한다(박광주, 2005: 1~2).

10)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1920년대부터 나타나, 1930년대에 본격화된 동양주의는 한마디로 동양이 서양을 ‘동양과 다른 존재’로 타자화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한, ‘동양에 의한 동양중심주의’이다. 그런데 동양주의는 서구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서양이 타자화했던 그 ‘동양’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동양의 복권을 주장하는 자원으로 삼았다. 이 복권된 동양을 매개로 동양연대를 주장하고 이를 통해 서양 제국의 팽창주의에 맞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던 동양주의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강화시키는 정치 지배 사상의 근간이었다”(서윤/정연, 2005: 21).

11) 사실 서체중용을(中體重用) 표방한 양무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반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된 근대 초기의 중국, 법고창신(法古創新)을 사회개혁이 별열정치의 완고한 기득권 수호 속에 좌절하면서 식민지의 현실을 겪는 한국, 탈아입구

2) 지연된 근대화와 아시아적 가치로서 근대성

근대성의 핵심가치, 그리고 이의 구현으로써 아시아적 근대성의 진정성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차대전 이후 특히 근대국민국가가 출범하고, 국가가 앞장서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서구 중심의 세계시간으로 본다면 서구가 탈근대로 향하던 시점, 아시아는 ‘뒤늦은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각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이란 경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경제발전은 국가란 ‘(서구의 개별적 이성주체와 대비되는) 집합적 이성주체’가 주도하여 국가 사회전반에 근대합리적인 생산관계, 시장질서, 정치적 민주화 등을 조형해냄으로써(즉, 전통으로부터 탈영토화 함으로써) 아시아적 근대사회로의 이행(즉, 근대로의 재영토화)을 수반했던 근대화 그 자체였다. 경제발전은 이런 점에서 ‘아시아적 근대로의 탈주’라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이러한 탈주는 무려 3세기 걸쳐 진행되었다. 즉, 계몽주의적 가치와 정신을 근대의 질서와 체제로 구축해내는 서구의 근대화는 3세기에 걸친 ‘우발적 사건들의 합류’(예: 산업혁명, 시민혁명, 근대국민국가의 설치, 근대시민권의 정립 등)에 의해 가능했다면, 아시아에서 이는 불과 1세대에 걸친 압축적 산업화에 의해 가능했다.

유럽이든, 아시아이든, 근대화는 그 근저에 근대성의 보편가치, 즉, 이성과 합리성, 인간주의, 시민중심의 사회성, 진보의 핵심가치를 근대적 삶의 내용과 제도로 조각해내는 과정을 깔고 있다. 이 점에서 근대의 핵심(혹은 보편)가치를 표방하는 유럽과 아시아의 근대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핵심(혹은 보편)가치가 유럽과 아시아의 시공간적 조건들과 결합하면서 구체적인 양태로 드러나는 과정과 결과에 있다.¹²⁾ 서구

(脫亞入歐)를 통해 서구의 근대 문물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일본 등 근대 초기의 동아시아 현실은 19세기 이후 상이한 국면에도 불구하고 서구지향성이란 공통된 경로를 밟았다.

12) 이를 강정인은 ‘유적(類的) 공통성’과 ‘종적(種的) 차이’로 부르고 있다(강정인,

로부터 이식된 근대성의 보편가치를 아시아의 시공간적 맥락으로 재정의 하고 재해석하며 현실의 삶으로 재현해내는 내부과정의 역동성 차이가 곧 유럽과 아시아적 근대성의 차이가 된다.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을 들여다 보면, 이는 서구에서 발원된 근대성의 보편요소와 특수요소가 (사후적으로) 분리되어, 보편적 요소는 남아 있되, 서구문화에 특유한 요소는 아시아 문화에 특유한 요소로 대체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아시아의 근대문명(혹은 근대성) ‘근대 서구문명의 충격으로 인해 아시아의 서구화와 서구문명의 아시아화(토착화)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혼용적(hybrid) 문명(근대성)’이다(강정인, 2002: 20).

이 혼용성은 서구와 비서구의 단순한 섞임이 아니라 아시아인들의 자기갈등과 성찰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내부동학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주체의 등장, 내부갈등, 경험과 가치관의 공유란 일련의 근대화 내부과정을 말한다. 근대화는 근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의식적인 주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통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을 동반했다. 그 갈등은 근대에 관한 전망과 해석의 대립이면서 동시에 근대성의 구현을 둘러싼 부문간, 집단 간 실천방식의 차이기도 했다. 어쨌든 근대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원 간 지난한 자기 싸움(예: 한국의 남북갈등, 베트남전쟁, 중국과 대만의 갈등 등)은 전후 아시아 국가들이 겪었던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갈등을 겪는 동안 아시아 각국들은 근대에 대한 관점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공유하며 또한 이를 근대사회 형성으로 투영해 내는 바,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는 바로 이의 체현인 셈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정치적 선진화란 근대(화)의 성공은 서구근대의 보편가치를 단순히 복사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아시아적 가치’로 재현해 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서구의 충격으로 조형되기 시작한 아시아의 ‘혼

2002: 20).

융적 근대성이 아시아의 주체들의 내부갈등과 해석 과정을 거치면서 아시아적 가치를 ‘재현하는(representative) 근대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현적 근대성, 즉 아시아적 근대성의 발현은 아시아 국가들이 근대화 경험을 공유하면서 갖게 된 지역적 정체성의 표현이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근대화 경험 공유는 1980년대 후반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반응으로 아시아 역내 외 국가들 사이에 각종 교류가 찾아지면서 촉진되었다. 아시아 역내 교류는 특히 1980년대 후반 플라자 담합 후 일본의 다국적 자본들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을 계기로 아시아권 내에서 아시아 자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생산 및 소비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활성화하기 시작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ho, 2002a 참조). 아시아 자본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는 단순한 경제적 재화와 용역의 거래망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하여 지역 특유의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결속기체들로 엮어진 ‘연성적·비구조적 공동체(soft unstructured community)’¹³⁾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다. 아시아권역 내에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가장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역이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중화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유교문화를 공유하게 된 결과, 근대화 과정에서 각기의 국가는 유사한 구조의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유사한 인간관계, 생산-소비관계, 정부-시민관계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유사성과 인접성 때문에, 냉전 종식과 더불어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또한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 사이에 제도적, 일상적 차원의 초국경적 거래 네트워크가 활발히 형성되고 있다. 초국경적 네트워크(transborder networks)가 ‘지역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결속기체’(geo-governance mechanisms)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는 점에 동아시아

13) 이에 대비되는 공동체는 유럽 혹은 북미의 ‘경성적(hard) 혹은 구조적(structured) 공동체’다. 이는 구성원간의 엄격한 합의, 규칙, 제도를 가지고 형성되는 초국경적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이에 비해 연성적·비구조적 공동체는 규칙과 제도적 합의 구조는 약한 대신, 정서적, 문화적, 인종적 일체성이 뒷받침되어 일상적인 교류와 결속이 강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아 지역은 전형적인 ‘연성적 블록’(soft bloc)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지도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앵글로 아메리칸 자유시장모델’, ‘유럽식 정치적 협상모델’과 대비되는 ‘아시아적 사회결속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¹⁴⁾(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명래, 2001: Cho, M.R., 2002a 참조).

이러한 초국경적 네트워크는 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 경험을 교류하는 틀이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각국의 근대성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가운데 아시아인의 지역적 정체성을 갖게 되는 문화적 소통구조다. 강정인에 의하면, “1970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눈부신 경제발전 및 냉전의 종언에 따른 이념적 대립의 종언 및 쇠퇴에 따라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적 의식 또는 정체성을 되찾게 되고 이로 인해 아시아는 비로소 ‘재발견’되고 ‘재아시아’되고 있다”(강정인, 2002: 7). 아시아적 의식 혹은 정체성을 찾게 되고 아시아가 아시아인에 의해 재발견되면서, 그간 서구에 규정되었던 아시아는 아시아인에 의해 ‘재아시아’되는 것은 다름 아닌 아시아의 근대성이 ‘아시아적 가치’를 표출하고 재현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부터 동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아시아적 가치론’은 근대화·세계화로 표출된 서구중심주의에 대항하여 전개된 것이다. 김광익(1998: 3)은 동아시아 담론의 출현을 ‘서구담론에 바탕 한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한 반작용’, ‘서구적인 것 이외에는 발전이나 성장이란 어휘의 실천을 불가능한 것을 믿었던 아시아인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을 찾는 작업’, ‘서구 중심의 세계체제적 확산에 맞서서 자위적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동양사회들의 욕구와 자신감이 빚어낸 담론’으로 파악하고 있다(강정인, 2002: 23). 아시아적 가치론은 이렇듯 서구중심주의를 반발하고 넘어서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탈근대 지구화의 시대 이는 서구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 급속한 서구형 근대화에 따른 아시아 내부의 이완과 탈전통화에 따른 정체성의 약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전통적 가치와 아시아적 근대화 조건 간의 일체화를 통해

14) 이 블록을 달리는 ‘북미의 경쟁자본주의’, ‘유럽의 복지자본주의’, ‘아시아의 유교적 공생자본주의’로 부르기도 한다(김경일, 1998).

서구의 것과 대비되는 아시아적 근대성을 재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탈근대 지구화 시대 아시아의 성공을 토양으로 하여 싹트는 아시아적 가치론의 핵심은 서구담론에 바탕을 둔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고, 이를 통해 아시아인들 스스로가 아시아를 재발견하면서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찰과 정체성의 질료들을 섞어서 진정한 아시아적 근대성을 탈근대 시대에 주조해내는 것이다.

3) 아시아의 탈근대적 근대성

아시아에서 근대성의 맹아는 19세기 서구의 근대가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확장해 오는 것에 대한 자의식적 저항으로부터 싹텄다. 아시아의 근대성은, 그래서, 겉으론 서구의 근대성을 저항하는 듯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서구의 근대성이 강압적으로 이식되고 적용되는 방식으로 조형되기 시작했다. 그럼으로써 아시아의 근대성은 근대 초기 서구 근대문명의 위력을 절감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주권의식으로서 민족적 자아가 눈뜨게 되면서 생성되었던 것이다(유임하, 1997: 9). 때문에 서구의 근대성은 합리성, 이성, 개인들의 결속체로서 사회적 관계, 민주주의란 이름의 ‘권력의 개인화’ 등을 강조하는 개별 주체의 이념(혹은 개인주의)을 근간으로 해 구성되어 있다면, 아시아의 근대성은 집합적 주체, 집단적 이성과 합리성을 우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아적 근대성을 구성하는 이러한 집합성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유교적 인간관계, 가족구조, 행동규범 등을 중요한 소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 요소들은 과거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그래서 아시아의 후진성을 조건지우는 것으로 서구인들에 의해 지적되었던 것들이다. 탈근대 시대인 오늘날, 이러한 전통의 유재들이 아시아적 근대성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는 것은 서구 근대성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의 근대화는 사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인중심주의, 감성과의 이항대립을 추구하는(혹은 비이성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전제로 하는) 이성

중심주의, 경제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중심주의, 정신을 부차화하는 물질중심주의, 자연을 억압하는 인간중심주의 등에 의해 압도됨으로써 여러 가치 중에서 중심적 가치를 권력화하는 단선적 진보를 이루어왔다.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물질적 생산성, 개체적 효용성 쪽으로 중심추가 기울어진 근대화가 이룩된 결과 그에 따른 다양한 문명적 병폐가 양산되고 있다. 전체의 통합과 조화를 미덕으로 하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규범들이 서구근대의 보편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노정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병폐를 사전적이며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행하게 된 것이다. 개인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서구적 근대 합리성이 아시아에서 집단적 합리성으로 특성화되었고, 이의 사회적 적용이 곧 아시아의 국가 주도적 근대화인 것이다.

아시아에서 발원한 전통(특수)의 가치와 서구에서 발원한 근대의 보편 가치가 선택적으로 결합한 것이 탈근대 시대 아시아의 근대성이 갖는 특징인 셈이다. 혹자는 아시아적 가치를 구성하는 이러한 전통유재(특히 유교적 유재)들은 아시아에만 특수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유럽에서도 근대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미 효과적으로 동원되었던 것이라 한다.¹⁵⁾ 막스 베버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유럽의 전통인 기독교의 신앙결사체적 교리, 근검절약과 소명을 강조하는 교리가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합리적 경제행위 규범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의 초기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주의나 민족주의와 같은 공동체적 규범은 유럽의 근대 영토국가 형성 토대가 되고, 또한 유럽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세계공략을 뒷받침했던 기제들이었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로서 결속, 공동체적 문화는 아시아에만 특수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의 초기 근대성을 제도화하는 데 동원되었던 이러한 문화적 기제들은 그 후 근대성이 발전해가는 가운데 현저

15) 박동천에 의하면, “아시아적 가치라는 이름 아래 운위되고 있는 원소들이 사실상 19세기 이래 서구사회의 전통/근대 이분법에서 전통에 해당하는 특성들과 거의 다를 바 없다”고 한다(박동천, 2002: 35).

하게 약화되거나 탈각되었고, 서구 근대성의 한계가 노정되는 것은 이의 결과인 셈이다.

공교롭게도 아시아의 전통가치가 근대 합리성의 가치와 선택적으로 결합되고, 그 결과 시너지적 발전(synergic development)(예: 국가 주도적(유교적) 경제발전(합리적 경제거래의 확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시아의 내부의 상황만치나 20세기 후반 서구 근대성의 한계가 노정되는 세계자본주의란 외적 상황이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했다. 서구의 근대성은 스스로가 제도화되는 가운데, 정신에 대한 물질의 우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 감성에 대한 이성의 우위, 주변에 대한 중심의 우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를 권력화하고 질서화하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이는 계몽주의적 합리성이 서구의 근대 시공간적 조건(예: 근대서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사회적 사건들)에 의해 특수화된 형태이지만, 어떻든 서구사회는 전후 이러한 합리성의 한계가 가져온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편향된 가치(예: 개인중심주의, 시장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등) 중심으로 발전해온 결과, 20세기 중후반에 들어 서구의 근대사회의 정합성(예: 계급합의, 국가규범 등)이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가령, 국가독점자본주의라 부르던 완숙기의 서구자본주의가 1980년대를 접어들면서 이른바 탈조직 자본주의(disorganized capitalism)로 변모하면서, 자본의 국제화와 그에 따른 국민국가의 역할 약화 속에서 자본-노동관계, 일상소비관계, 국가-시민사회관계, 지배이념 등이 급속히 변형,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근대의 중심 가치로부터 배제되고 억압된 부문에 대한 성찰과 주목이 이루어지면서 이성 중심의 근대를 넘어서는 다양한 철학적, 정치적 실험들이 이른바 탈근대주의란 이름으로 무성하게 나타났다. 서구 근대성의 한계, 그리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탈근대성의 모색이 서구 근대성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세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고, 또 그 극복을 위한 시도도 이제 서구, 비서구가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서양적 근대의 폐해는 비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서구의 주변부들뿐만 아니라 영·미 계통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서구의 핵심에서도 뚜렷하게 탈식민지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생태주의의 형태로 서구적 근대의 인식론적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점에서 서구적 근대에 대한 극복의 탈근대성을 찾는 작업은 서구뿐만 아니라 비서구인인 우리에게도 서구적 근대라는 현실극복을 위한 하나의 출구가 된다고 한다”(정시기, 2002: 266).

탈근대의 세계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구적 잣대로 볼 때 실패로 간주되었던 혹은 지연됐던 아시아적 근대(성)를 (재)창출할 필요성과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에 새로 태어난 아시아의 주체들은 그간 억압된/배제된 전통의 복원을 되새김질 하면서 아시아의 근대성을 재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서구가 지배해 왔던 전 지구적 근대를 극복하는 탈근대성 논의의 장을 여는 데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정시기, 2002: 265~266).

아시아적 근대성의 재창출, 나아가 이를 통한 서구 근대성의 극복과 탈근대성의 추구를 위한 전통으로 회귀는, 서구에 의해 규정된 아시아에서 아시아인에 의해 규정되는 아시아로의 회귀이고, 내생적 근대성의 구축을 위한 토대로의 회귀이며, 나아가 지구화 시대 타자화된 근대성에서 주체적 근대성으로의 회귀, 그래서 서구 근대성의 극복과 탈근대성에의 주체적 개입을 응축하는 상징이다. 전통은 근대성의 구축에서 탈각되어야 할 것이라기보다 본디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서구에서 근대성은 서구 전통을 구성하는 역사적 자원, 이를테면 기독교정신, 르네상스, 종교개혁 등을 근대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재해석하면서 근대적인 인식과 삶의 양식으로 재조해냈던 것의 결과물이다. 이에 견주어 아시아의 근대성이 실패하거나 혹은 지연되었던 까닭은, 외세의 침략 결과이기도 하지만, 서구로부터 부과된 ‘근대성의 충격’에 피동적으로만 반응한 결과, 전통의 창조적 승계 위에 스스로의 정신문화적 재생산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구근대의 실패가 뚜렷해지고, 아시아의 자의식적·해석적 근대성이 모색되는 탈근대의 시대인 지금, 아시아에서 근대성

의 재창출을 위한 근거이자 토대로서 전통에 대한 회귀와 그 활용은 근대성의 내부를 치밀히 다지기 위해선 필연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것이 성공을 거둘 때 아시아의 근대성은 진정한 독자성을 갖게 되고, 또한 서구근대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대응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탈근대성을 함께 고민해야 할 지금, 전통으로 회귀는 탈각해야 할 것(전통)과의 변별을 통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유의 전통은 통치이자 지배철학인 유가적 전통이다. 탈근대 시대 전통으로의 회귀는 이러한 사유의 전통으로 회귀가 아니라, 역으로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나 욕망의 해방을 추구하는 다른 사유의 방식인 도가(道家)적, 불가(佛家)적 전통으로의 선택적 회귀가 되어야 한다(정시기, 2002: 270). 지금까지 아시아의 근대성이 실패한 것(가령, 일본의 유교적 천황제, 중국의 패권적 사회주의, 한국의 아류의 제국주의 등)은 ‘유가적 통치’로부터 탈영토화하지 못한 데 있다면, 탈근대 시대 전통으로의 회귀는 바로 도가적, 불가적 전통을 탈근대의 것으로 재영토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정시기(2002: 270)는 “후기 근대라는 서구 근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탈근대성의 징후가 보이고 있는 오늘날, 탈각해야 할 근대적 서구와 회귀해야 할 탈근대적 서구에 대한 전지구적 탈근대에 대한 인식의 작업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의 근대성이 경제발전과 같은 현실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16) 탈근대시대, 탈각해야 할 서구와 회귀해야 할 서구에 대하여 들뢰즈-가타리는 ‘국가철학(state philosophy)’와 ‘노마돌로지(normadology)’로 구분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는 데카르트의 코기토 개념을 통해 플라톤의 국가철학이 부활한 시대에 해당한다. 아시아의 유교적 통치철학은 바로 들뢰즈-가타리의 분류에서 국가철학과 유사한 것이다. 탈근대 시대, 서구에서 회귀해야 할 전통이 노마돌로지라면, 아시아에서 그에 상응하는 것은 유교적 국가철학의 탈영토화를 허용하는 전통, 즉 개인의 자유와 인간해방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도가적, 불가적 전통(혹은 가치)’이다. 아시아적 노마돌로지로서 도가나 불가의 전통에 대한 주목 및 복원은 아시아의 실패한 근대는 물론, 서구의 실패한 근대를 넘어서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장시기, 2002 참조).

서구 근대성의 한계, 또한 이에 따른 세계질서의 변화란 외부 상황에 크게 힘입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만 좁혀서 보더라도, 아시아의 산업이 경쟁적인 것은 서구의 후기산업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부장적 문화나 공동체적 규범에 바탕을 둔 임금관계, 고용관계, 기업관계 등을 자본주의 시스템에 접목시킴으로써 과도한 시장경쟁과 구조적인 노·자 갈등의 병폐를 사회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탈근대의 도래와 함께, ‘해체적이고 탈중심화된 가치’, 가령 인간에 대한 자연, 남성에 대한 여성, 주체에 대한 타자, 물질에 대한 정신, 시장에 대한 네트워크 등의 가치들이 다시 주목받고 실천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근대서구의 기준으로 그간 폄하되고 주변화되었던 아시아적 가치가 탈근대의 대안가치로 주목을 함께 받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통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아시아의 근대성은 탈근대 요소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시아의 근대성이 서구 근대성의 대안이거나 서구의 탈근대성과 일치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서구의 탈근대성이 막 짝을 띄우는 시간성과 아시아의 근대성이 동시화되는 것은 지구화(globalization)란 21세기적 시공간성과 관련된다. 지구화는 국민국가 중심의 근대사회가 약화되면서 국경을 넘어서는 규범과 실천이 보편화되는 지구촌 사회의 출현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조명래, 1999). 들뢰즈-가타리에 따르면, 서구의 사유와 통치의 방식을 지배해 왔던 ‘국가철학(state philosophy)’은 약화되어야 하고, 대신 개인의 자유와 욕망의 추구를 허용하는 ‘노마돌로지(normadology)’가 지구화시대의 (탈)근대성을 사유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어리, 2012). 국가공동체의 약화와 더불어 시장의 경쟁관계로 맺어지는 모래알 같은 개인과 그 이념인 정체성이 탈근대 사회형성의 기본 세포가 된다(Castells, 1997). 지구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사회구성방식 근저에는 고도화되는 자본주의의 논리, 특히 금융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오늘날 금융자본의 범지구적 순환에 따라, 경제, 사회, 정치적 활동이 파생적으로 초국경화되면서 범지구적으로 통합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데, 이러한 추세로부

터 자유로운 국가나 지역이 없다고 본다면, ‘모래알 같은 개인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탈근대의 사회구성 혹은 생활양식은 서구와 비서구와 구분 없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Castells, 1997).

탈근대성으로 탈주하는 경향을 내재한 아시아의 근대성은 이 지역에 고유한 전통과 문화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것과 탈근대의 것들 간의 절묘한 혼용성을 띠고 있다(조명래, 2001a; Cho, 1999). 가령, 아시아의 근대성을 분해하면, 유교적 국가철학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합리성과 서구의 개인주의적 합리성이 결합되어 있고, 동시에 도교, 불교와 같은 전통적인 노마돌로지에 기초한 탈국가적인 주체의식과 탈근대의 소통양식에 의해 촉진되는 개체의식이 결합되어 있어, 전통, 근대, 탈근대의 동시성과 동존성을 띠면서 서구의 근대와 탈근대와는 구분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1990년대 후반 IT산업, 즉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이버 소통방식의 확산, 그에 따른 네티즌 세대의 등장은 아시아적 노마돌로지가 새로운 생활양식과 주체로 구현되는 것을 돕고 있다.

전통으로부터 근대와 탈근대를 아우르는 광역적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의 근대성의 주요 특징은 무엇보다 ‘혼용성(hybridity)’이다. 시공간의 압축화가 가속화되는 지구화 시대 근대성을 완성시켜가는 아시아에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받아드리고 수용하여 녹아내면서 그들의 것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형상해내는 자기변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혼용이 단순한 이질적인 것의 섞임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고도의 자의식이 작용함으로써 정체성을 반영하는 제3의 것이 생성되고 있다(이리, 2012). 19세기 서구 근대성의 충격에 의해 맹아가 싹튼 아시아의 근대성은 식민화 내지 비주체적인 근대화를 겪는 동안 긴 동면에 들어갔지만, 이차대전 후, 안정된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틀이 만들어지면서, 그 와중에 아시아의 새로운 주체들은 근대화를 재추진하면서 근대성의 해석과 구현을 둘러싼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겪었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과 남북대립, 남한 내에서 근대화과정에서 대두된 사회세력 간, 집단 간, 지

역 간 갈등 등은 모두 이러한 갈등과 반목의 전형이다. 근대화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에는 서구로부터 이식된 근대성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이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갈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일국 내에서 근대화를 주도하는 세력과 이에 지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세력들의 저항과 극복의 치열한 과정이 아시아 근대화 과정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이러한 과정의 전개 속에서 경제성장, 민주주의의 확립, 시민사회의 등장과 같은 아시아의 근대적 삶의 질서와 방식이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근대성을 구성하는 이러한 해석·저항·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통의 비합리성, 이식된 형식적 근대성에 대한 재해석과 극복만이 아니라, 국가철학에 바탕을 둔 근대화의 구세력과 노마돌로지를 지향하는 탈근대의 신세력 간에 갈등, 아시아란 범역 내에 민족 간 갈등 등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언젠가 완성될 아시아적 근대성을 향해 탈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아시아의 근대성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요소는 ‘저항과 탈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힘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은 동아시아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기술발전, 그리고 지배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간의 지속적인 갈등의 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예: 자연과 인간의 갈등)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시아의 근대성은 삶의 터전이란 공간 환경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역으로 공간환경의 근대화를 통해 아시아의 근대성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을까?

4. 아시아 근대성의 도시: 한국의 경험

1)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구분

근대와 근대성이 동시간적으로 작동한 서구의 근대(성)와 달리,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하다. 즉, 하나의

시기적 특성인 근대성은 단일한 세계시간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성에 의해 주요하게 결정되는 시간을 넘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근대성의 출현에 의해 규정된 근대의 시기는 이전 시기의 특성이 중첩 내지 잔존하는 독특한 계열의 배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은 서구중심의 근대담론에서 주장되는 동시대적인 측면이 아니라 근대 속에 전근대성, 근대성, 탈근대성이 혼재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서윤/정연, 2005: 4).

근대성이 근대와 어긋나는 것은 근대화의 시점과 단계에 따라 근대를 특징짓는 가치, 태도, 원칙들의 경향이나 배치로서 근대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동학혁명을 통해 맹아가 싹뻗던 한국적 계몽주의(이성과 합리성의 강조, 사람주체의 설정 등)는 일제에 의해 억압되는 상황을 거치면서 서구와 다른 민족이란 집합적 자아의 범주와 독특하게 결합하면서 뒤늦은 근대성의 주체화 길로 이어졌다. 근대성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근대의 출발 단초는 1876년 일본과 맺은 병자수호조약으로 인한 개항이란 사건을 들 수 있다.¹⁷⁾ 그 후 근대란 시간대는 전개되는 근대화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19세기 후반기인 개항이후 근대화 단계, 20세기 전반기의 식민지의 근대화 단계, 20세기 후반기의 분단체제의 근대화 단계 등으로 나뉘진다(강만길, 1978). 이러한 단계 중에서 근대성을 올바르게 표현해내는 단계는 근대로의 이행(변화)에 의해 구성된 개개인의 사유체제, 삶의 방식, 규율과 습속, 주체의 등장 등을 수반하면서 지금(현대)의 근대와 동시대적 유사성을 담아내는 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개항 이후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근대는 밖으로부터 강제에 의해 설정된 시간대이고, 그런 만큼 이를 표방하는 근대성도 서구 근대성의 모방적 근대성이면서 동시에 식민지적 근대성의 특징이 중첩된 모순적 근대성이라 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사회 전반에 근대적 양태의 출

17) 임현진은 개항이 한반도에 서구의 근대가 이식된 결정적인 시기이며, 개항 이후 우리의 역사인식에 근대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임현진, 1996: 192).

현과 그 변화의 작동방식 및 효과가 지닌 현재성에 초점이 놓여진다면”(서윤/정연, 2005: 4), 한국적 근대성의 진정성은 해방이후 분단 속에서 국민국가가 주도한 근대화에 의해 생성되기 시작했고, 21세기 들어오면서 일정하게는 탈근대성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삶의 터전으로서 근대 도시도 서구의 근대화에서 목격되었던 ‘근대=근대성=근대 도시’란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식민지 시대와 해방 후 시대로 근대의 시간대를 크게 나눈다면, 근대성과 근대 공간환경(도시)의 특성도 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아시아적 근대성의 하위 양태로 근대성과 그 공간환경(도시)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치른 다음인 1960년대 국가 주도적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대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식민지하의 도시화와 식민지 근대성

한국의 전통도시들은 인구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규모로, 비록 봉건적 질서 속에 있었지만, 자연이 만들어 준 시공간적 질서에 따라 인간적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주지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조명래, 2004c).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적 삶을 담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통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 근대로의 이행이란, 전통적인 삶의 터전이 주체들 간의 근대 합리적 관계 설정을 통해 근대적

18) 이 시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1894년에서 1910년까지는 근대 계몽기로 볼 수 있고, 또한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근대화, 서구우월주의, 식민지주의가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혹자는 계몽의 논리나 담론이 아니라 일상 차원에서 근대의 진정한 시작은 1930년대부터라고 보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개항 이후 해방까지는 외세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상황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근대성은 서구의 근대성을 받아들인 일본을 통해 서구중심주의(제국주의, 식민지주의, 서구주도 근대화 등에 의해 지배받는 측면과 일본 자신이 아시아의 주변국을 식민화하기 위한 ‘동양주의’가 증착되어 있는 ‘근대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고석규, 2002). 이는, 외세의 이익에 복속되어 있는 점에서, 왜곡된 근대성이면서, 해방된 주체에 의해 추후 재해석되고 재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지체된 근대성이라 할 수 있다.

인 것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구 근대화가 거쳐 간 공간환경적 경로였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 근대가 전근대의 창조적 해석과 계승이듯이, 근대의 공간환경도 전통으로부터 단절이 아니라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 창조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하비, 2005).

하지만 개항과 함께 시작된 제국주의적 근대화 세력들의 한반도란 공간환경으로 침투는 그 위에 오랜 시간 동안 꾸려왔던 전통적 모습살이와 그 방식을 그들의 이해에 따라 와해시킴에 따라 한국적 근대성의 공간환경적 조건은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비슷하게 초기부터 왜곡되었다. 개항과 더불어 서구의 선진문물을 이용해 도시의 근대화를 도모하려는 내부로부터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구한말 정부는 실제 지방의 주요 도시에 우체국, 철도, 병원, 학교, 전신전화국 등과 같은 근대적인 도시시설을 설치해 근대도시로의 변모를 일신하려고 했다.¹⁹⁾ 이 중 대표적인 예는 고종황제의 지시로 국권을 회복하고 통치의 근대화를 선양할 목적으로 1904년 무렵 덕수궁(당시 경운궁)과 그 앞의 광장(대한문 앞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미국 워싱턴의 모습을 본 딴 방사형 도시구조를 구축하려는 대한제국의 ‘도시개조사업’을 들 수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염복규, 2004 참조). 그러나 민족주체들의 이러한 시도는 드세어지는 일제의 침략으로 근방 폐절되면서 공간환경의 주체적 근대화는 긴 시간 동안 휴지에 들어갔고, 대신 식민지 세력에 의한 공간환경의 탈구적 근대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서구식 근대화를 막 시작한 일제에 의한 한반도 식민화는 서구에 의한 식민화를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아시아(동양)에 의한 아시아(동양)의 식민화’, 그리고 ‘일본식 서구화에 의한 아시아의 식민화’이란 이중적이면서 모순적인 탈주체화가 강제되었다.²⁰⁾ 외

19) 개항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수원, 청주, 공주, 전주 등 13개 도급 도시에 각급 재판소, 경찰서, 세무서, 보통학교, 사범학교, 우편관서, 전신전화국 등을 설치하여 근대 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하고자 했다. 한편 경부선, 경의선 개통으로 대전, 신안주(新安州) 등의 신도시가 출현하기도 했다.

20) 일제 식민화가 수반한 이 ‘이중적 탈주체화’, 특히 이의 공간환경적 결과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형적으로 서구의 근대성을 모방했지만 내면에서는 일본의 초기자본주의 문제(예: 식량 및 자원 부족, 강대국의 위협 극복 등) 해결을 위해 기획된 식민지 지배와 수탈에 철저히 조응하는 방식으로 일제하의 식민지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룩된 근대성은 식민지 근대성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제 초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항장에서 출발한 ‘신도시에 대한 우대’와 ‘전통도시에 대한 박대’였다(이하 내용은 고석규, 2005 내용을 주로 참조했음). 일제는 이미 강화도 수호조약에 의해 획득한 조차지인 부산(작은 촌락)을 ‘계획적 신도시’로 만든 뒤 식민지 진출의 교두보를 삼았을²¹⁾ 정도로, 일제는 주요 도시를 처음부터 식민지 지배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다. 실제 일제는 1913년 부제(府制)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도시체계를 식민지 세력이 허물어내는 가장 중요한 충격이 되었다. 부(府)는 현대적 개념의 도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1913년 부로 지정된 지역은 경성, 인천, 군산, 대구, 부산, 평양, 진남포, 원산, 청진 등 12곳이었는데, 이 중 조선시기의 전통도시는 서울, 대구, 평양 3곳뿐이었다. 나머지는 1876년 이후 개항된 항구나 어촌들이었다. 개성, 전주, 진주, 해남, 함흥 등과 같은 전통적인 도시들은 부에 포함되지 않았다(조명래, 2000b).

부로 선정된 12개 지역은 한일합방 전까지 총독부의 전신인 통감부의 지방관서인 이사청(理事廳)이 있던 곳이다. 이러한 곳을 일제가 ‘도시’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나머지 전통적인 도시들을 군의 지위로 전락시킨 것은 일인이 장악한 도시를 통해 한반도의 공간환경을 식민화하기 위한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의도는 부의 인구구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부의 공통적인 현상은 일본인 거주지자의 수가 조선인보다 많거나 일본인이 주로 거주한다는 사실이다(조명래, 2000b). 이것은 일제 강점

21) 조차지를 방문해 감명을 받은 한 공무원은 귀국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성공 모델’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이것이 후에 ‘정략론’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자세한 것은 손정목, 1982 참조).

기의 지방제도가 일본과 일본인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924년 2월1일 ‘동아일보’ 기사는 도시가 일본인의 공간이며 조선인의 희생의 산물임을 서술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조선인의 10에 9는 농촌의 주민으로되, 일본인의 100의 90은 도시의 주민이다. 그러므로 도시의 건설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요, 도시 중에서도 일본인 시가에 전력을 다한 것이다. 그래서 도시를 이용하는 능력이 빈약한 조선인들 자기의 부와 노력으로 도시를 살기 좋게 한 뒤에는 농촌으로 퇴거하는 것이다(《동아일보》, 1924년 2월 8일 1면 1단, 고석규, 2005 재인용).

1938년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인 가운데 71%는 50개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인으로서 50개 도시에 거주한 사람은 전체인구의 11.5%에 지나지 않았다. 도시는 이처럼 일본인을 위한 공간이었고, 그런 만큼 일제가 편성한 도시체계는 이중적이었다. 신도시와 전통도시 중 신도시만을 부(府)로 편성하면서 전통도시의 성장을 왜곡하는 그러한 이중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이중성이야말로 도시공간에 나타나는 제국-식민지 관계의 본질이었다.

이중성은 도시 내에서도 발견되었다. 도시인구 중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대개 조선인이었는데, 특히 빈곤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올라온 농촌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일본인은 소수지만 도시의 중심부를 차지하면서 도시의 통치를 통해 농촌을 수탈하는 식민지 지배전략을 구사했다. 수탈로 인해 몰락한 농촌의 빈곤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식민지 통치하에서 탈농인구들은 도시의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한 채 주로 도시외곽에 거주하면서 토막굴이라 불리는 빈민지역을 형성하였다. ‘도심 일인-외곽 조신인’이란 식민지 도시의 이중구조는 제국-식민지, 지배-피지배, 외세-민족의 모순구조를 공간환경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이중도시에서 일본인들은 정거장, 관청, 은행, 회사, 학교, 시장, 그 밖에 근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한 기관들을 자기들이 거주하고 가깝고 편리한 곳에 세우도록 했다. 상하수도 시설, 도로포장, 교통통신, 전기, 가스, 보건, 위생시설 등도 예외 없이 대개 일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이렇게 하여 도시는 근대적인 형태를 갖춘 일본인 거리와 구태의연한 상태에 머물러 있던 조선인 거리로의 구분되었다(예: 진고개 일대 화려한 명동과 낙후한 북촌의 비교해 보라). 도시란 공간환경을 통해 드러난 근대와 전근대의 표현은 다름 아닌 근대화를 둘러싼 식민지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의 불균등한 관계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식민지하에서 도시란 공간환경의 근대화는 식민세력을 위한 것으로, 민족주체의 의지나 관점이 배제되어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주체적인 공간환경의 근대화는 일제강점기 동안 불가능했다. 강점기 중반을 거치면서 근대적인 상업유통시설(예: 백화점)이나 문화시설(예: 문화주택) 등이 조성되고 ‘모던 보이’, ‘모던 걸’ 등 같은 서구적 취향의 ‘신식 조선인’들이 등장했다고 하지만(최병태·예지숙, 2009), 그것은 식민지 지배문화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피식민지 조선인들이 이에 동화되는 현상일 뿐이었다(Henry, 2014).

요컨대, 일제하에서 도시는 식민지 근대성의 현상이었다. 식민지 근대화 그리고 그 근대성은 도시를 통해 그 왜곡성을 가장 명확히 드러냈던 것이다. 소렌센(Sorrensen)은 “70만 일본이 도시인구의 중요부분을 점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식민지에서 근대가치와 제도가 현존하는 도시지역은 가장 이국적인 공간이었다”라고 하면서 도시가 식민지 근대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었다고 했다(고석규, 2005에 재인용). 도시에서 근대성은 이중적 식민지성(일본을 통한 서구의 지배와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의 지배)이 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도시의 근대화는 일제강점기 동안 광복할만하게 진전되었지만, 근대성의 핵심가치인 주체의 관점으로 볼 때 식민화에 의해 오히려 왜곡되고 지체된 것에 불과해, 주체의 회복을 통해 재추진되어야 할 미래의 과제로 남겨졌다.

3) 해방 이후의 도시화와 도시적 근대성

패전에 의한 일제로부터 해방은 또 다른 ‘외부로부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식민 지배를 종식시키고 민족주체에 의한 근대화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주체적 근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지난한 갈등과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6·25 민족상잔은 이런 점에서 탈식민지 국가 건설을 둘러싼 엘리트 집단 간 패권 다툼,²²⁾ 즉 ‘주체적 근대화’의 방식에 대한 비극적이면서 거대한 해석 갈등에 해당했다.²³⁾ 승전국의 개입으로 한반도에 두 개의 민족정부가 들어섰고 전쟁으로 민족공동체의 분단이 고착되면서 근대화는 분열된 공간환경 속에서 체제의 노선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국토의 남반부에서는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주의 세력이 국가형성을 주도했고, 그와 함께 자본주의를 체제노선으로 채택함으로써 삶의 터전으로서 공간환경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의해 규정되었다. 계몽적 개인주체들에 의해 조형된 서구의 근대성과 달리 국가(민족이란 범주의 다른 표현)란 집단적 이성주체(흔히 근대화세력(modernization force)이라 부름)가 앞장서 외생적(서구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내생적인 것과 결합된 근대의 생산-소비관계, 일상적 인간관계, 국가-시민 관계 등이 구축되었다. 한국적 근대성은 바로 이로부터 산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주도적 근대화가 공간적으로 도시화를 통해 집약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근대도시 혹은 도시적 삶은 한국적 근대성의 진수라 할 수 있다.

근대화와 도시화의 관계는 ‘사회와 공간의 변증법’적 관계에 해당한다. 근대화의 사회성은 도시란 공간성을 통해 구현되고 도시란 공간성은 근대화란 사회성을 숙성시키면서 근대성 그 자체를 표현한다. 양자는 서

22) 한반도에서 남북 분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해석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23) ‘외부충격’에 의한 탈식민화와 독립국가 내에서 전쟁 등 다양한 해석적 갈등을 겪은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로를 반추하는 거울이지만 도시는 근대화와 그 성질로서 근대성을 물질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한국의 도시적 근대성은 해방 이후 지난 한 세대 동안 집약적으로 전개된 국가 주도적 산업화란 근대화가 초래한 사회적 변동의 공간적 결과라 할 수 있다. 근대성의 형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근대화는 국가형성을 주도한 정치경제적 엘리트들이 근대 산업경제를 건조해 가는 가운데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틀을 만들었다면, 도시화는 그러한 틀 내에서 개인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가 근대 자본주의적 일상을 살게 되면서 근대성의 속살을 채웠다. 물론 이 두 영역 혹은 주체에 의한 근대화는 전근대(전통)와 근대, 서양과 동양, 외생적 합리성과 내생적 합리성, 전체와 개인, 공과 사 등의 이질적이고 이항적 요소들을 내부적으로 융합해가는 사회적 과정을 내부화하고 있었다.

크게 보면, 한국의 근대사회를 틀 짓는 국가제도, 계급이념, 자본주의적 축적 조직, 과학기술 지식체계, 심지어 민주주의나 합리성 등은 모두 동원된 근대화 과정을 통해 외부(서구)로부터 들어와 한국의 시공간적 변수(도시화 등)들과 결합하여 한국적인 근대의 특수성을 구성했다. 국가는 경제개발이란 이름으로 근대적 기구와 제도, 자본-노동관계 등을 만들기 위해 사회전반에 개입하지만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한 좀 더 직접적인 개입은 도시정책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울의 경우, 근대적 도시계획에 바탕을 둔 도시건설은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을 계기로, 도로, 공원, 학교, 공단 등 근대적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주거지 개발(예: 토지구획정리정사업, 아파트지구지정 및 개발 등), 신시가지 조성(예: 여의도개발, 강남개발 등), 녹지대 조성(예: 근린벨트 지정) 등이 다양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의 대단위 주거지 조성방식의 강남개발, 1980년대 도심재개발 및 근교 신도시건설, 1990년대~2000년대 주택재개발 및 뉴타운 건설 등 각각의 개발단계를 대표하는 도시건설정책들이다(조명래, 2011). 근대화에 의한 근대적 도시공간의 탄생은 근대의 주체, 근대의 일상, 근대의 경제와 정치가 바야흐로 ‘한국에 특수한 것(특수성으로 근대성)’으로 구축되는 그 자체다.

이 모두는 한국의 개발국가 대리자인 지방정부에 의해 조국 근대화를 도시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목적과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도시화가 점차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한국자본주의를 공간적으로 심화(spatial deepening)하는 조건과 방식으로 전개되었다(조명래, 2014). 큰 틀에서 보면 도시건설의 과정은 경제성장을 공간적으로 일구어내는 도시정책과 도시 계획이란 국가주의 개발방식을 취했고, 그러한 개발의 공간환경 속에서 도시의 개개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등과 같은 계층 계급적 삶의 관계를 만들게 되면서 한국 특유의 ‘개발주의 근대성’이 생겨났다(조명래, 2006). 개발주의 근대성은 경제적 이익과 편익의 신출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도시의 물리환경적 개발과 조성이 갖는 이념으로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도시적 표현이다. 근대화는 이렇듯 도시화를 짝으로 하여 근대성의 도시화, 도시적 근대성을 이룩했다. 가령, 근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공급된 용도지역(zoning), 도로교통망, 아파트 등 주거시설, 공원·광장 등 공공시설 등은 모두 도시주체들의 일상 과정과 관계를 담아내고 촉진하면서 도시적 근대성을 주조해내는 공간 환경적 틀로 기능했다. 그러나 실제의 도시적 근대성은 자본주의적 근대성(형식적/외생적 근대성)을 띠고 있는 공간환경과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한 도시의 일상주체(내용적/내생적 근대성)들이 상호 작용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삶을 근대의 것, 즉 ‘혼용적 근대성’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공간 사회적 과정이 곧 도시화다.

근대화를 공간적으로 옮겨내는 과정으로서 한국의 도시화가 갖는 보다 소중한 의미는 불과 30여 년 만에 농촌에 살던 절대다수의 인구가 도시에 사는 절대다수의 인구가 바뀐, 그래서 도시의 (불완전하지만) 근대주체를 등장시킨 점이다(이하는 조명래, 2004a 발췌정리). 말하자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은 인구의 단순한 지리적 재배치가 아니라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가는 모든살이의 전환을 의미하고, 또한 전통적인 농촌적인 삶의 방식이 근대 산업적인 삶의 방식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해방 후 민족정부의 근대화 정책 하에 전개된 도시화는 단순한 인구의

도시적 집중이 아니라, 그에 수반하여 전근대적인 인간관계나 생업의 방식을 근대적인 것으로 바꾸어냈다. 도시적 근대성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실체적 내용물이다.

한국의 도시화률은 1961년 군사정부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1960년 28.0%에서 1970년 41.2%, 1980년 57.3%, 1990년 74.4%, 2000년 79.7%로 급증했다.²⁴⁾ 1960년에 도약을 시작한 도시화는 약 한 세대(30년) 후인 1990년에 이르러 서구 도시화의 종착단계라 할 수 있는 75%에 이르렀던 것이다.²⁵⁾ 서구의 도시화가 도약기에서 성숙기까지 150년에서 200여년의 시간을 소요했다면, 한국의 도시화는 그 5분 1 혹은 6분의 1의 기간 동안 한 사이클을 완주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도시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압축’이라는 데 있다. 압축이라 함은 시간의 단순한 단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근대화란 ‘사회적 변동’을 만들어 내는 단계적이면서 연속적인 과정을 최단 시일에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이란 것은 공간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즉, 도시화가 짧은 기간이지만 도약기로부터 성장기, 가속기를 거쳐 완숙기를 한 사이클 완주했고, 각 단계마다의 공간사회적 변화 총합이 한국 특유의 도시적 근대성으로 구현되었다.

24) 지표로만 본다면 도시화는 일제강점기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에 해당하는 부(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일제 강점기 동안 도시화률은 1920년 3.4%에서 1944년에 13.7%로 증가했다. 하지만 앞서 논급되었듯이, 민족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제하의 도시화는 근대적인 생산 및 일상관계의 형성을 수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정한 도시화는 해방 후 국민국가의 형성 후, 특히 한국전쟁이 끝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1955년 도시인구는 528만 명으로 도시화율(읍부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인구기준)로 치면 이미 24.5% 수준이었는데, 이도 1960년엔 28.0%로 상승했다. 지표상으로 1950년대의 도시화는 이미 도약기에 있었지만 이는 한국동란과 같은 사회적 혼란에 기인한 것이었다. 때문에 모듬살이 변화를 수반하는 전면적인 도시화는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능했다.

25) 도시화률은 대개 15% 수준에서 급격한 증가를 시작한 후(이를 도약기라 부름), 40~50%의 가속기를 지나 75% 수준에 이르면 둔화되는 성숙기에 접어든다.

한국의 압축적 도시화는 이렇듯 단순히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적 산업화와 맞물린 사회화 효과를 내면화하면서 전개되었고, 도시적 근대성은 이로부터 산출된 것이(조명래, 2011). 단계 별로 본다면, 도약기 도시화는 인구의 이농으로 인해 농촌에서 꾸려지던 일차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일탈시키는 사회화 과정을 동반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이 인간관계 양식의 변화를 근간으로 한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1960년대부터 인구의 절대다수가 농촌을 벗어나는 변화, 즉 농촌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해체되는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성장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대도시²⁶⁾로 이주해 도시에서 새로운 정주적 삶을 살게 되면서 도시적 근대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도시로 이주한 이농인들은 임노동관계를 중심으로 고용 및 소득 활동을 하면서 전근대적인 생산관계를 벗어나 자본주의적 산업적 생산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삶을 본격적으로 살게 되었다. 도시의 고용 및 소비생활, 인간관계에 적응하기 위해 도시 정착민들은 우선 농촌적인 요소를 스스로 탈각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도시(화)는 이들에게 도시적 삶의 관계를 학습하는 사회화의 의미를 갖는다. 가령, 1970년대 초중반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조성된 아파트는 농촌에서 더불어 살던 ‘동네적 삶’의 양식을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적 삶의 양식’으로 바꾸는 데 따른 일상생활양식을 학습하는 중요한 틀 거리가 되었고, 그때부터 개별가정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텔레비전은 근대문화의 규범들을 학습하는 것을 돕는 매체적 도구가 되었다. 가정 밖에서는, 직장 생활을 통해 근대적 고용관계 혹은 생업관계를 배우는 반면, 일한 대가인 임금을 가지고 생필품을 사서 소비하는 관계를 배우면서 자본주의적

26) 공간적인 측면에서 우선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의 도시화가 전통적인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존도시의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었고, 또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가령,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구의 70% 이상은 대도시들이 수용했는데, 이 대도시들은 해방 전에 이미 만들어진 도시였으며, 그 하부기반구조는 조선시대와 일체를 거치는 동안 형성되었던 것이었다. 한마디로 ‘대도시로의 집중’이 한국 도시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경제활동에 적응해 갔다. 또한 소모임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다른 성원들과 소통하면서 도시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가능성도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도시화가 제공하는 학습적 사회화의 효과다.

1980년대를 접어들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더욱 가속화되지만, 지난 15년 이상 지속된 도시화로 인해 도시인들은 일정하게 규율되고 질서화된 사회적 삶을 살기 시작한다. 개인으로서 도시인들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회사란 조직체의 구성원으로 지위와 역할을 자기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게 되고, 또한 가족과 더불어 소비나 문화활동을 하면서 도시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체득하게 된다. 개인들의 역할관계와 생활양식들이 집합화되어 도시사회는 전체로서 일정한 질서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주거지가 분화되고 고용지위가 차별화 되며 소득 수준과 사회적 위광을 누리는 계층구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이러한 도시사회적 질서와 구조에 역으로 적응해가면서 도시인들은 개인으로서 좀 더 분명한 도시적 인성(urban personality)과 정체성을 획득해 갔다. 한편 개인적인 삶의 양식들이 모여 전체로서 도시의 독특한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데, 이는 도시 밖의 지역과 인적·물적·정보적 교류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의 새로운 지배문화이자 이념으로 기능하였다. 이렇듯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는 가속기의 도시화는 도시이주자들로 하여금 도시인으로서의 의식과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새로운 주체에 관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회화의 효과를 발휘했다. 이것이 토대가 되어 1980년대 후반 초보적 수준에서나마 시민권적 의식을 갖춘 중산층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집합적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곧 시민사회로 열리게 되었다(조명래, 2001b). 서구의 근대 도시주체와 견주어 볼 때, 1980년대부터 등장한 도시주체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시민권을 자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집합적(계급적) 주체’(예: 서구의 부르주아 계급)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농촌으로부터 이주해온 도시인들의 정체성에는 여

전히 농촌공동체에서 체득한 것이 깔려 있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적 정체성이 불안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 도시화의 원숙기에 접어들면 이농세대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도시의 인구구성은 이농세대가 도시에 와서 생산하고 교육시킨 2세대들이 다수로 채워지는 구성변화를 겪었다. 이로써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적 생활양식과 정서를 일관적으로 학습한 도시세대 혹은 도시주체가 바야흐로 생겨나게 되었다. 1990년대를 접어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산업경제는 더욱 첨단화·국제화되면서 고용부문에서는 전문직 관리직과 같은 중산층 관련 직종이 급성장하는²⁷⁾ 반면, 전통산업의 퇴출로 생산직 등의 감소와 서비스직, 임시직과 같은 하층 관련 직종이 확산됨으로써 도시의 취업 및 계층구조 전반에 심대한 지각변화가 생겼다. 일상영역에서는 소득수준이 향상하고 소비양식이 고도화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일상관계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이른바 ‘소비적 정체성’이 도시 신세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소비생활의 고도화 이면에는 상품관계가 심화되는 변화가 있지만, 이도 더욱 파고들면 그 뿌리에는 도시의 사회적 관계가, 도시경제의 첨단화·세계화와 더불어, 화폐적·시장적·경쟁적 관계로 재편되는 변화가 놓여 있다. 1997년 IMF위기는 도시사회의 이러한 질서를 더욱 고착시켰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개인으로서 도시인들은 그들의 계층적 지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간다. 그 삶의 질서는 개인화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의 부모세대가 남긴 계층적 기회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관계 속에서, 또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원리를 바탕으로 한 고용 및 소비생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는 것이다. 이 같은 관계적 삶을 살도록 도시인들을 사회화시키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도시의 현재 상황이다. 도시화의 이러한 사회화 양식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지구화의 흐름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에게 강제되는

27) 서울의 고용관계에서 전문직, 관리직은 1980년 6%에서 2000년에 18%로 늘어났는데, 이는 서울의 산업구조가 생산자서비스업(예: 연구개발, 금융, 디자인, 광고 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에 해당한다.

삶의 방식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지구화가 도래하면서, 우리의 도시화는 이제 바야흐로 일국(국가적 도시체계)을 넘어서고 있다.

요컨대, 국가 주도 산업화의 공간적 전개과정으로 도시화는 전통 농촌적 삶의 관계를 도시적인 것으로 재편하는 것과 함께 도시의 일상 삶을 더욱 고도화하고 합리화하는 사회변동을 수반했다. 한국의 압축적 도시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근대적인 도시적 삶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근대의 도시주체를 출현시켰고, 또한 이들의 일상 삶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합리성을 사회전반에 확립시킨 점이다. 한국의 산업적 근대화는 도시화의 이러한 효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터이다. 한국 근대성은 이렇듯 도시화에 담긴 공간사회적 변동의 결과로 조형된 도시적 근대성으로 가늠된다. 도시적 근대성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맞물려 도시공간이 자본주의적 공간환경으로 재구성되고 여기에 조응해 도시주체들이 일상 삶을 근대적인 것으로 재조직해가는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 과정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러면 아시아적 근대성으로 한국도시의 근대성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4) 한국도시의 탈근대적 근대성: 혼용적 근대성에서 재현적 근대성으로

한국의 근대성이 도시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이는 곧 ‘도시의 근대성’이라 부를 수 있다. 도시의 근대성은 도시의 형태, 사회적 관계, 이념 등의 영역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조명래, 2002d).

도시의 근대성은 우선 도시의 물리적 구조가 합리화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이하 조명래, 2002d). 시민혁명이나 자유상공인의 등장과 같은 근대적 사회관계 형성을 통해 도시의 근대성이 구현되었던 서구도시와는 달리 한국도시는 자유·평등·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의 선행적 형성을 통해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는 내생적 구조를 가지지 못하였다. 대신 토지를 용도별로 구획하고(zoning), 도로를 자동차중심의 광로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주거공간을 아파트 중심의 병영적 주거단지를 조성

하는 등, 물리적 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배열을 통해 도시의 근대성이 각인이 되었다. 공공정책을 통해 공급된 근대적 도시 시설들은 그에 담기는 도시의 각종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의 합리화와 선진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기능했다(예: 아파트에 의한 주거생활양식의 변화). 그렇지만 도시전체가 근대적인 형태와 물리적 구조로 전면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시의 근대 물적 구조는 근대와 전근대의 다양한 병렬적 조합들이 중층적으로 엮어진 양상과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가령, 재래시장과 백화점, 구멍가게와 편의점, 다방과 카페, 달동네와 고층주상복합단지, 강북과 강남 등과 같이 상이한 시간대의 사회성 혹은 합리성을 담는 시설과 지구들이 중층적으로 병렬되어 있는 것이 한국도시 근대성의 결이다. 근대성의 도시라 할지라도 그 내에는 근대로 획일화시킬 수 없는 상이한 시간대의 합리성이 혼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혼재는 도시의 개별주체(개인, 가정, 공공기관 등)들이 점유하고 있는 미시적인 공간환경에서부터 도시전체의 거시적 공간환경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는 급속한 근대화와 도시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권 도시들의 일반적인 풍경이다.

도시의 물적 환경이 서로 다른 시간대의 사회성과 합리성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도시의 인간적, 사회적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이하 조명래, 2002d 참조).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던 지난 30여 년간의 도시화는 과거 공동체 사회의 인간관계가 도시의 유기적 분업과 삶의 방식에 걸맞은 현대 합리적 인간관계로 재편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도시의 복잡한 일상관계는 계약, 시장 거래, 화폐적 관계 등과 같은 ‘합리성의 기제’에 결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합리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전통적, 전근대적인 결속기제들(예: 지연, 혈연, 학연, 전통 관례, 인정 등)이 도시생활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고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도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이다(Cho, M.R., 1999). 따라서 도시사회 전반은 근대적인 규범과 전통적인 규범이 혼합된 행위 및 결속양식에 의해 형성·유지되는 데, 한국도시

<표 1> 시민적 사회성(civil sociality) 대 유연적 사회성(flexible sociality)

	시민적 사회성	유연적 사회성
행태적 양식	합리적	습관적
	객관적	주관적
	공공적 행위	사적 감정
관계적 양식	규칙적	항속적
	개인주의적	집단적
	소유관계	사적 이해관계
	계약적	위계적
	경쟁	협력
조직적 형태	형식적	담론적
	제도	네트워크, 연결
조절기제	시장	연고적 조직
	법, 계약	규범, 신뢰
영역	공공적 기준	사인 간 합의
	공공영역	공공/사적영역의 혼재
시민사회	강함	약함
국가 전형	서구 국가	동아시아 국가
근대화 과정	장기적/점진적	단기적/압축적
	시민혁명	계획적 발전
	시장화	산업화

출처: Cho, 1999.

의 근대성은 바로 이렇게 형성된 도시의 ‘유연적 사회성(flexible sociality)’을 반영한다. 서양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성이 ‘시민적 사회성(civil sociality)’이라면,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유연적 사회성(flexible civility)’은 전통과 근대, 공과 사의 경계가 불명확함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탄력성과 소통성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표 1> 참조)(좀 더 자세한 논의는 Cho, M.R., 1999 참조).

다른 아시아 도시들과 비슷하게 한국 도시의 근대성은 이렇듯 압축적 도시화에 동시적으로 담겨 있는 다양한 시간대의 문명적 요소들의 ‘절묘

한 절합'에 관한 특성을 온전히 투영한다. 즉, 공과 사, 동양과 서양, 전통과 근대, 근대와 탈근대, 내부와 외부, 통제와 해방, 가부장주의와 평등주의, 남성성과 여성성, 기표와 기의, 주체와 육체 등의 이항 대립적 가치요소들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도시일상 삶의 동학으로부터 한국 도시의 근대성이 구조되어 나온다. 가치의 이러한 다원성은 도시의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이들에 의한 근대적 도시화가 재추진되면서, 도시의 근대성을 해석하는 다원적 전망이 도입되고, 또한 도시의 근대성을 조형하기 위해 기원과 기준이 상이한 다양한 가치요소들을 동원함으로써 생긴 결과이다. 서구의 도시화에서는 점진적이고 장기적 과정을 통해, 그리고 순차적이고 계기적으로 적용되고 동원되었던 관점과 가치요소들이 한국의 압축적 도시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화된 것이다. 이러한 다원성 때문에, 아시아의 근대성이 그렇듯이, 한국의 근대성, 이를 집약하여 보여주는 도시의 근대성은 모두 전통적인(한국적인) 것과 서구 기원적인 요소, 식민지적인 것과 탈식민지적인 요소, 공적인 것과 사적인 요소,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요소들이 혼용되어 있는 특성을 띠고 있다.

‘절묘한 절합’ 혹은 ‘혼용(hybridity)’으로서 한국의 도시적 근대성은 무수한 이항대립을 내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혼용 속 양립’은 개인의 인격 체계로부터 도시 시스템 전체에 편재해 있다. 그래서 도시는 근대성을 제도화하는 국가, 제도, 체제의 힘이 강하게 흐르면서도 일상의 미시적 삶에는 철저한 개인의 욕망과 전통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여지는 대립성을 보인다(조명래, 2002d). 도시화 과정에 동원된 이러한 가치요소들이 이항대립으로 남아 있을 때, 이는 도시의 일상과정 전반에 다양한 갈등을 일으킨다. 가령, 도시의 평균적인 가족은 농촌에서 전통적인 교육과 가치를 획득한 성원(구세대)과 신세대의 자유분방함을 선호하는 성원(신세대)들로 혼재되어 있는 데, 이러한 혼재는 가족성원 사이에 ‘도시적 삶’을 둘러싼 잦은 이해상충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 도시사회학 관점으로 보면 이는 도시 근대화를 둘러싼 가족이란 조직차원에서 발생하는 주체들(세대들) 간의 도시해석과 실천방식의 대립이자 갈등에 해당한다. 도

사회를 둘러싼 이러한 해석적, 실천적 갈등은 개인, 가족 차원에서만 아니라 학교, 직장, 시장, 정책 영역 전반에서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게 한국 도시의 근대성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혼융’이 ‘이항대립’을 통해 ‘해석 갈등’으로 전환은 다름 아닌 압축적 도시화에 의해 생성된 혼융적 근대성이 도시주체들 간의 갈등을 매개로 해석적 근대성으로 옮겨가는 자기 진화를 의미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적 현상은 도시운동의 대두와 활성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빈번해지기 시작한 도시운동은 도시주민들이 그들의 권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립하고 갈등하는 집합적 실천에 해당했다. 1980년대 후반 도시중산층의 등장과 함께 (도시의) 시민사회가 열리면서, 국가 주도적 도시개발의 폐해와 한계에 대한 시민 자의적 대응과 극복이 도시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와 시민, 개발업자와 주민, 가옥주와 세입자 대립과 같이 초기 도시운동은 외형적으로 집단 간 이익갈등의 양상을 띠었지만, 기저엔 도시화를 둘러싼 도시주체들 간 전망과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시민사회가 성숙해가면서 도시운동은 국가와 시장에 의해 조형된 도시 공간을 다양한 시민권적 공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발전했다. 공공 공간권리 찾기,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심 광장화, 역사경관보전, 군사기지 이전과 공원화, 땅 한평 사기(공유화) 등의 운동은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추진했던 시민적 공간 조성운동의 구체적인 예들이다. 이밖에 녹색가계·생활협동조합·지역화폐 등과 같은 호혜적 경제운동, 동네축제·문화교실·대안학교 등과 같은 지역문화운동, 노숙자쉼터·독거노인 돌보기·소년소녀가장 돕기 등과 같은 자발적 공익운동, 참여예산·의회감사·단체장소환·청원·민회 등과 같은 시민자치운동 등도 모두 도시를 시민적 공간으로 바꾸는 데 연루된 도시운동들이다(조명래, 2003d 참조).

시민사회를 무대로 전개된 이러한 도시운동들은 국가 주도적 근대화 와 그 공간적 과정인 도시화를 추동했던 권력집단, 국가정책, 지배적인 입장에 대해 시민(권자)들이 제기하는 비판과 저항이란 관계식을 내포하

고 있다. 이는 국가 주도의 도시화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권력과 시스템에 의해 외생적으로 규정된 도시를 ‘시민주체의, 시민주체를 위한, 시민주체에 의한 도시(city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즉 ‘사람중심도시(people-centered city)’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압축적 도시화 과정에서 주인이 없었던 도시에 주인(사람 혹은 시민)이 돌아오고 도시의 공간환경도 도시주체들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삶의 터전으로 점차 재조직되고 있다. 동아시아 도시담론의 변화는 이러한 경향을 일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아시아권 도시학자들 사이에서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는 ‘토건개발의 도시에서 사람중심의 도시로’, ‘신자유주의식 글로벌 도시에서 상열(convivial)의 코즈모폴리탄 도시로’, ‘경쟁의 도시에서 공유의 도시로’, ‘경관도시에서 토속도시(vernacular city)’로의 전환은 동아시아 도시들이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뀌고 있거나 바뀌어야 함을 표방하는 새로운 도시담론들이다(Cho, 2014, 2015; Douglass, 2008, 2014).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의 전환은 ‘국가에서 시민사회로’란 도시 만들기 주체의 변화를 반영한다(Cho, 2015). 이는 동시에 도시의 근대성이 혼용적 근대성에서 갈등적, 해석적 근대성으로의 이행을 넘어 국가와 자본에 대척되는 시민사회의 가치가 도시 정체성으로 투영되는 ‘재현적 근대성’으로의 전환까지 함의한다.

동아시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의 가치와 그 정체성, 즉 시민적 정체성을 표방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해체된 역사적 유재들(예: 경복궁과 성곽)을 복원해 단절된 역사정체성을 회복하고, 국가 주도적 개발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파괴된 도심 환경(예: 청계천)을 복원해 서울환경적 정체성을 되살려 내는 등은 이의 비근한 예들이다. 4대문 안 도심부를 성곽으로 둘러쳐진 ‘한양도성부’이란 이름으로 명명하고, 원(原) 서울의 공간조직(골목길 등), 자연경관(내산, 물길 등), 역사적 유산 등을 근대의 공간체계로 되살려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시정책은 서울을 역사적 정체성의 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시도들(예: 서울의 역사도심계획, 2030서울플랜, 지역생활권계획 등)이 전문가나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시 만들기는 사람중심 혹은 시민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기에 충분하다. 주민과 공동체 차원의 도시 만들기에서는 사람의 중심성 혹은 시민 사회적 가치의 투영이 더욱 분명하다. 경제(체제)논리 중심의 대규모 철거형 정비 대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살아 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 삶을 가꾸는 마을 만들기 수법의 정비를 서울시는 아예 ‘사람중심의 주거지재생’이라 부른다. 이밖에도 많은 도시공간 변화들이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차가도도를 폐쇄하고 사람길인 보행 중심 도로 바뀐 뒤,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보행공간의 원리를 확대해 도심부를 재생하는 ‘서울역 고가도로의 공원화 정책’은 그 대표적인 예다(조명래, 2015). 민간소유 건축물 공간의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개공지’ 공급의 의무화는 자본의 공간에서 시민의 공간으로 도시공간을 작지만 크게 바꾸는 대표적인 도시계획수법이다.

도시 정체성의 표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랜드마크가 될 상징적 시설이나 모뉴멘탈 빌딩들이 도시계획방식으로 들어서는 것도, 비록 부동산 개발논리를 띠고 있다 해도, 재현적 근대성의 또 다른 표현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는 대부분의 동아시아 대도시(서울, 동경, 북경, 상하이, 홍콩, 타이베이, 싱가포르 등)들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다. 즉, 현재 세계적으로 100층 이상 ‘초초고층’ 건물들이 가장 많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은 동아시아의 대도시들인데, 이는 동아시아국가들의 향상된 경제적 삶과 높아진 경제적 위상, 나아가 국가적 자존심을 도시건축물을 통해 표현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서울의 경우, 초고층빌딩은 동북아 내에서 서울의 도시국제경쟁력, 즉 서울의 정체성을 일정하게 투영하고 있다. 가령, 한강로 등에 서울의 국제화를 선도할 최첨단 초고층 오피스 빌딩군이 조성되고, 상암지구 등에 세계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할 디지털 도시가 건설되

며, 여의도나 청계천 주변 등에 동북아 금융산업을 선도할 국제금융센터가 들어서고, 권역별 중심지에 잠실 롯데월드와 같은 복합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도시적 눈높이에서 보면 하나같이 동아시아 내에서 서울의 국제중심성이란 ‘도시정체성의 고양’을 추구한다. 국제경쟁력 향상은 사람중심 서울 만들기에서도 핵심부분이 되고 있다. 일상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서울은 국제자본의 유치, 국제행사의 개최, 인프라 건설, 도시산업육성을 둘러싸고 상하이, 북경, 동경, 타이베이, 홍콩 등 인접 아시아의 대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란 차원에서 설정되는 초국경적, 지구적 조건과 서울의 일상생활 차원에서 설정된 장소적, 지방적 조건이 서로 맞물리는 상황에서 서울 대도시 발전은 물론 서울다움(정체성)마저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표방하는, 최근의 도시적 정체성은 이렇듯 사람중심의 삶터로서 도시정체성만 아니라 동아시아 내에서의 중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일제 식민화에 의해 왜곡된 공간구조를 바꾸고, 개발독재하에서 권력에 의해 왜곡된 공간을 재편하며, 도심부 전체를 역사적 공간으로 복원하고, 공공공간을 시민의 일상공간으로 돌려주며, 도시의 전략적 위치에 동북아 중심성을 선도하는 상징건축물을 설치하는 등의 도시공간의 개조는 모두 도시의 공간환경을 통해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시민적 권력성을 복원하며 나아가 서울의 정체성을 아시아란 초국경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공간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 도시공간은 이렇듯 ‘나다움을 공간적으로 표출하는 재현의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적 현상은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예: 타이베이, 상하이, 싱가포르, 수라바야, 교토 등)에서 비슷하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아시아적(재현적) 근대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Cho, 2015: Douglass, 2015).

도시의 공간환경을 통해 재현되는 ‘나다움(자기정체성)’은 지나온 역사와 현재의 삶에 대한 도시주체들의 반성과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지구화 시대, 도시의 일상은 해당도시나 일국의 영토를 벗어나 교류

와 교환을 통해 초국경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때문에 일상활동이 국경을 넘어 인접한 다른 나라도시들과 연계되고 접촉하는 현상으로서 도시 국제화는 도시화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한다. 한국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도시국제화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다. 서울시도 199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BESETO’ 벨트(Bejing-Seoul-Tokyo를 잇는 동북아 도시발전축) 구축을 선도해 왔다. 내부적으로도 서울은 인구 10명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일 정도로 다문화도시로 바뀌고 있다. 서울 전역엔 크고 작은 ‘미니 글로벌 빌리지(mini-global villages, 서초 서래마을, 가리봉동 연변거리 등)가 30여 군데 생겨났고, 다문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글로벌 센터가 꾸려지고 있다(조명래, 2014). 대외적으로 서울시는 도시개발의 경험을 아시아의 인접 국가도시들(예: 타이베이, 방콕, 울란바토르, 카트만두 등)로 수출하면서(혹은 교류하면서) 서울의 정체성을 아시아로 확장해가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3국 정부는 매년 각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East Asia City of Culture)’를 동시에 선정해 도시차원의 아시아적 문화 정체성을 찾고 공유해가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²⁸⁾ 도시의 정체성은 이젠 동북아의 도시로서 정체성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고, 그와 함께 시민의 정체성도 아시아인의 정체성으로 넓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구화 시대 초국경적 교류망을 통해 도시일상생활의 조건이 결정된다는 것은, 도시화의 조건 또한 아시아란 정체성이 확장된 영역에서 찾아야하고 또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을 ‘도시의 아시아화’라 부를 수 있다. 아시아적 근대성의 재창출에서 핵심이 아시아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재현해가는 데 있다면, 탈근대 시대 한국의 도시화는 이

28)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2012년 5월 상해에서 개최된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3국 문화부 장관들이 합의한 사항.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의 이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국가별 1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 상호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기로 한 것이다.

젠 한국이란 영토공간을 벗어나 아시아라는 초국가적인 공간 속에서 아시아 다른 도시들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도시의 탈근대적 근대성은 도시를 통해 재현되는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적 근대성이 되기 때문이다.

5. 맺음말: 탈근대 시대 아시아란 공간

인간 존재로서 삶은 시간과 공간의 끊임없는 교직 속에서 설정된다. 오늘날 지구화 시대의 삶은 이러한 시공간의 교직이 지구적 스케일(global scale)로 확장됨으로써 전에 없이 중층적이면서 다차원적인 관계망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조명래, 2004b). 시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 속에서 한 장소, 한 시간대의 삶은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의 삶과 동시화 되면서 바야흐로 ‘지구촌 일상체계’가 등장하고 있다(조명래, 1999: 기든스, 2003). 그 결과, 영토국가(territorial state)²⁹⁾ 내에서 완결되는 근대적 삶의 체계를 설명하던 사회과학 이론들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기든스, 2003: 윌러스타인, 1996: 조명래, 1999). 탈근대성은 바로 영토국가 중심의 시공간적 의미체계의 와해 혹은 탈영토화의 메타문화(meta culture)적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다(조명래, 2000a).

그렇지만 이러한 탈근대의 탈영토적 삶이 장소를 일탈하는, 즉 탈장소적인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근대의 삶보다 장소에 더한 일상성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탈근대의 특징이다(조명래, 2002a). 그것은 영토국가를 스케일로 하던 시공간 삶의 체계가 지구적 영역으로 확장되면서도 동시에 지방적 영역으로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탈근대의 삶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 삶의 장소적 궤적(the place-based trajectory of daily life)’을 그리면서 동시에 영토국가를 넘

29) 이 글에서 사용하는 영토국가는 국민국가(nation state)와 유사 개념으로 사용한다.

어서는 ‘삶의 탈장소적 궤적’과 접속되어 있다. 그러한 삶의 시공간적 구성은 특정 장소(예: 도시)에 터한 ‘나의 정체성’이 일국을 넘어서는 시공간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삶은 이렇듯 장소에 터한 일상세계가 탈영토적인 시공간 차원으로 확장하는 과정과 탈영토적인(지구적) 시공간적 차원의 삶이 특정 장소의 일상세계로 침투하는 과정이 상호 교차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때문에 삶의 터전은 장소에 붙박아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 준지구적, 지구적 스케일로 뻗어 있는 중첩성을 띠고 있다(조명래, 2000a). 지방화와 지구화의 흐름이 특정 장소의 삶 과정을 중심으로 상호 침투하면서 혼용하는 것이 탈근대의 삶의 시공간적 열계라는 뜻이다.

삶의 터전인 장소(적 시공간)로부터 지구(적 시공간)로, 지구로부터 장소로 쌍방향의 일상 흐름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일상주체의 정체성 외연이 확장이 되고 있다(예: 홍콩사람에서 아시아인으로 확장). 이는 곧 ‘초국가적인 지역’ 형성의 정초가 되고 있는 데, 유럽, 동아시아, 북미란 통합 지역 등장 뒤에 바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삶의 시공간 재편이란 현상이 있는 것이다. 가령, 한국인에게 삶터로서 도시는 한국이란 영토를 넘어 인접한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의 상호작용하는 아시아의 도시로 재편된다. 때문에 한국인에게 아시아는 이제 단순한 지리적 범역이 아니라 역사 문화적 삶의 조건을 함께 해석하고 사유하는 가운데 ‘정체성의 아시아화’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이다(Cho, 2002b). ‘정체성과 사유의 공간’으로 아시아란 공간은 르페브르가 말하는 ‘나를 발현하고 발화하는’ ‘재현의 공간(space of representation)’을 말한다. 즉, 아시아란 공간은 지역주체들이 아시아적 가치, 전통, 생활양식, 정서를 교감하고 공유하면서 나다움의 확장으로 아시아다움을 재현하는 공간이다.

정체성의 외연이나 삶의 탈영토적 체계로서 아시아의 시공간적 특질을 우리는 ‘아시아의 탈근대성’이라 부를 수 있다. 서구 중심의 탈근대성과 대비를 통해 나다움, 아시아다움을 설정하고 배태시킨다는 점에서 이

는 서구의 근대성을 넘어서는 것과 함께 서구의 근대성을 베껴 쓴 아시아 자신의 근대성에 대한 해석적 일탈성을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탈근대성의 논의가 근본적으로 근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대의 확장과 급진적 재성찰로 규정되듯이, 아시아의 탈근대성도 결국 아시아 근대(성)의 확장이자 이에 대한 급진적 재성찰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의 탈근대성은 서구로부터 이식되고 베껴 쓴 근대성을 넘어 아시아의 주체적 근대성으로 돌아가거나 찾아가는 ‘사유, 해석, 성찰’ 속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근대성의 진정성에 대한 회귀를 의미한다. 탈근대시대, 아시아란 공간은 아시아인들의 공유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진정한 근대성을 재해해내는 무대이다.

원고접수일 : 2015년 11월 8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21일

최종원고접수일 2015년 12월 22일

❖ Abstract

The Modernity of Asia and City: the Korean Urban Experience

Myung-Rae Cho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Asian Urban Modernity and its reflection on the living space like city with reference to the Korean experience of compressed urbanization. In so doing, it intends to contemplate on a new modern urban subject situated in the time space expansion of Asia's identity. It begins with overview of several conceptual issues like the 'generic and specific' types of modernity, reflexivity of modernity, environment and space as a material expression of modernity and then moves on examining Asian modernity which is typified as 'hybrid' vs. 'interpretive'. Korea city's modernity and its spatial representation are subject to close examination as a way of revealing the above conceptual issues. The paper concludes with drawing attention to the shaping of Asian space in an era of globalization.

Keywords: the Enlightenment, modernity, Asian modernity, colonial modernity, urban modernity, representative modernity

참고문헌

- 강내희. 1995. 『공간, 육체, 권력』. 문화과학사.
- 강만길. 1978.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강정인. 2003.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서울: 아키반.
- 김경일. 1998. 『동아시아와 세계체제이론』. 《정신문화연구》, 제21권 제1호, 27~45쪽.
- 김광역. 1998. 『동아시아 담론의 문화적 의미』.《정신문화연구》, 제21권 제1호, 3~25쪽.
- 김성기. 1994. 『세기말의 모더니티』. 김성기 외 공저.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고미숙. 2001. 『동아시아 근대(성) 형성, 그 차이와 반복』. 《모색》, 창간호, 1~9쪽.
- 고석규. 2005. 『목포 도시공간에 나타난 제국-식민지 관계』(미출간 보고서).
- 고재광. 2001. 『동아시아 담론의 정치적 함의: 신보수주의와의 친화성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48호, 114~131쪽.
- 고영근. 1999. 『아시아적 가치의 혼란과 동아시아 경제위기』. 《21세기 정치학회보》, 제9집 제2호, 1~20쪽.
- 기든스 지음. 김미숙 외 옮김. 2003.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 데이비드 하비 지음. 김병화 옮김. 2005. 『모더니티 수도, 파리』. 서울: 생각의나무.
- 박광주. 2005. 『아시아 공동체, 현실인가 신화인가?』(<http://cafe.naver.com/gaury/19900>).
- 박동천. 2002. 『정보화와 아시아적 가치』.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한국정치외교사학회 주관 <정부화, 세계화와 동아문명> 세미나 발표논문(2002.10.25).
- 서윤·정연. 2005. 『식민지 근대의 이중성: 1930년대 식민지체계의 동양주의의 배치와 작동방식을 중심으로』(<http://cafe.naver.com/gaury/15594>).
- 손정목. 1982.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 연구』. 서울: 일지사.
- _____. 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 과정연구』. 서울: 일지사.
- 송도영. 2001. 『식민지화와 도시공간의 근대적 재편성』. 《한국문화인류학》, 제34집 1호.
- 쑤거 지음. 백영서 외 옮김. 2003.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서울: 창비.
- 르페브르 지음. 양영란 옮김. 2011.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
- 메리필드 지음. 남청수 외 옮김. 2005. 『매혹의 도시, 마르크스주의를 만나다』. 서울: 서울.
- 윌러스타인 지음. 이수훈 옮김. 1996. 『사회과학의 개방』. 서울: 당대.
- 염복규. 2004. 『식민지 근대의 공간형성』. 《문화과학》, 제39호, 197~219쪽.
- 유임하. 1997. 『근대/근대성의 문헌연구 과제와 그 전망』. 《동악어문집》, 제32집,

487~514쪽.

- 이성환. 1994. 『근대와 탈근대』. 김성기의 공저.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임정택. 1994. 『계몽의 근대성』. 김성기의 공저.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임춘성. 2002. 『동아시아문학론의 비판적 검토』. 《중국어문학》, 제39집, 45~67쪽.
- 임현진. 1996. 『사회과학에서 근대성 논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역사연구조사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서울: 역사비평사.
- 윤평중. 1992.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과 포스트마르크스주의』. 서울: 서광사.
- 장시기. 2002. 『동아시아의 근대형성과 전지구적 탈근대: 루쉰과 나쓰메 소세키 문학의 노마돌로지』. 《영미문학》, 제2권 제1호.
- 정종현. 2005. 『동아시아 담론의 문제와 가능성』. 《상허학보》, 제9집, 39~69쪽.
- 조명래. 1999. 『포스트포디즘과 현대사회 위기』. 서울: 다락방.
- _____. 2000a. 『지구화와 국민국가체제의 위기에 관한 재성찰』. 학술단체협의회 편. 『전환기시대의 한국 사회』. 서울: 세명서관.
- _____. 2000b. 『20세기 근대화 속의 서울지방자치』. 《향토》 제60호, 85~126쪽.
- _____. 2001a. 『도시, 갈등, 시민성』. 《한국 사회》, 제4집, 31~82쪽.
- _____. 2001b. 『근대성과 도시』. 참여연대 참여사회아카데미 엮음. 『20세기 한국을 돌아보며』. 서울: 한울.
- _____. 2001. 『동아시아의 초국경적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공간과 사회》, 통권15호, 101~139쪽.
- _____. 2002a. 『탈근대의 공간성: 공간정치경제학적 이해』. 이론과 실천 모임 엮음. 『국토와 환경』. 서울: 한울.
- _____. 2002b. 『지구화, 경제위기, 그리고 발전국가의 성격전환』. 김대환·조희연 편. 『동아시아의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전환』. 서울: 한울.
- _____. 2002c. 『지구화, 탈조절화, 탈국가화』. 김대환·조희연 편. 『동아시아의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전환』. 서울: 한울.
- _____. 2002d. 『현대사회의 도시론』. 서울: 한울.
- _____. 2003a. 『사회과학의 등장배경으로서 계몽주의의 재조명』. 《공간과 사회》, 제18호, 161~179쪽.
- _____. 2003b. 『지역사회에의 도전: 도시공동체운동의 등장과 활성화』. 한국도시연구조사 편. 『도시공동체론』. 서울: 박영사.
- _____. 2004a. 『도시화의 흐름과 전망』. 《경제와 사회》, 제60호, 10~39쪽.
- _____. 2004b.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생태학』. 《환경과 생명》, 통권 제40호, 28~47쪽.
- _____. 2004c. 『한국성과 도시』. 순천시 주관 <순천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에 관한

- 세미나 발제논문.
- _____. 2006.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서울: 환경과 생명.
- _____. 2011. 『한국의 도시현실과 도시지식』. 정인하 외. 『건축·도시·조경의 지식지형』. 서울: 나무도시.
- _____. 2013. 『공간으로 사회읽기』. 서울: 한울.
- _____. 2014. 『국제도시 서울의 두 얼굴』. <나.들>, 제20호(6월)(<http://na-dle.hani.co.kr/arti/issue/761.html>).
- _____. 2015. 『도시재생으로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의 검토—재생방법론의 관점에서』. <환경논총>, 제56권, 4~19쪽.
- 존 어리 지음. 윤여일 옮김. 2012.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서울: 휴머니스트.
- 최병태·예지숙. 2009. 『경성리포트』. 서울: 시공사.
- 히야마 하시오. 정성태 역. 2000. 『동양적 근대의 창출』. 서울: 소명출판.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 Beck, U., A. Giddens and S. Lash. 1994. *Reflexive Modernization*. Oxford: Polity Press.
- Castells, M.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London: Blackwell.
- _____. 1997. *The Rise of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 Cho, M. R. 1999. “Flexible sociality and the postmodernity of Seoul.” *Korea Journal*, vol. 39.
- _____. 2002a. “The East Asian bloc in the making?.” in Green Drover. et.al. (eds.). *Regionalism and Subregionalism in East Asia*. New York: Nova.
- _____. 2002b. “Civic spaces in urban Korea: the spatial enrichment of civil society.” *Inter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Review*, vol. 24 no. 4, pp. 419~432.
- _____. 2013. “From convivial vernacular neighborhoods to a global vernacular city: the case of Seoul,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ritage Activism for Vernacular City in Asia, held i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7-19 July, 2014.
- _____. 2015. “Progressive city in the making?: the Seoul experienc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king a Progressive City: Seoul’s Experience and Beyond, organized by the Seoul Institute, held in Seoul, Korea, 15-16 October, 2015.
- Crook, S. et. al. 1992. *Postmodernization: Change in Advanced Society*. London: Sage.
- Douglass, M. 2008. “Globopolis or cosmopolis?—alternative futures of city life in 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5th East Asian Regional Conferences in Alternative Geography (EARCAG), 13-16 December 2008, Seoul, Korea.
- _____. 2015. “The rise of progressive cities for human and planetary flourishing—a global

- perspective on Asia's urban tran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king a Progressive City: Seoul's Experience and Beyond, organized by the Seoul Institute, held in Seoul, Korea, 15-16 October, 2015.
- Durkheim, E. 1933. *Th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 Toronto: Macmillan.
- Friedland, R. and D. Borden. 1994. "Nowhere: an Introduction to Space, Time and Modernity." in Friedland, R. and D. Borden (eds.). *Nowhere: Space, Time and Modern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ll, S. 1992. Introduction, in Hall, S. and B. Geiben. (eds.). *Formations of Modernity*. Oxford: the Open University.
- Hamilton, P. 1992. "The enlightenment and the birth of social science." in Hall, S. and B. Geiben, eds. *Formations of Modernity*. Oxford: the Open University.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 Henry, T. A. 2014. *Assimilating Seou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lton, R. J. 1986. *Cities, Capitalism and Civilization*. London: Allen & Unwin.
- Healey, P. et. al. (eds.). 1995. *Managing Cities: the New Urban Context*. New York: John Wiley & Sons.
- Knox, P. L. 1993. "Capital, material culture and socio-spatial differentiation." in Paul L. Knox, ed.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New Jersey: Prentice Hall.
- Kumar, K. 1995. *From Post-Industrial to Post-Modern Society*. Oxford: Blackwell.
- Lash, S. 1992. "Berlin's second modernity." in Paul L. Knox (ed.).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New Jersey: Prentice Hall.
- Lash, S. and J. Urry. 1994. *Economies of Sign and Space*. London: Sage.
- Liotard, J-F. 1989. "Answering questions: what is postmodernity?" in *The Postmodern Condition*. tr. by G. Bennington & B. Massumi, Minnesota: The University Minnesota Press.
- _____. 1991. *The Inhuman*. tr. by B. Bennington & R. Bowlby. Oxford: Polity Press.
- Marx, K. 1973. *Grundrisse*. London: Penguin.
- McLennan, G. 1995. "After postmodernism - back to sociological theory." *Sociology*, vol. 29, no. 1.
- Rabinow, P. 1994. "On the archaeology of late modernity." in Friedland, R. and D. Borden (eds.). *Nowhere: Space, Time and Modern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aunders, P. 1983.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 London: Unwin.